

유신정권 폭력성 국가가 첫 인정 사건관련자 공소시효 걸려 한계

■ 최종길교수 '공권력 사망' 결정 의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27일 최종길 교수 사건을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죽음'으로 결정한 것은 옛 권위주의 정권의 부도덕성과 폭력성을 국가기관이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 결정문에서 "사건이 일어난 1973년은 유신정권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거세게 전개됐던 시기"라며 "당시 체제 수호를 담당하고 있던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는 위기의식을 조성해 권위주의 통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을 발표했고, 이 과정에서 최 교수를 간첩단의 일원으로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민주화 운동과 공권력에 의한 타살 부분을 더욱 포괄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규명위는 "권위주의 정부의 정당성 강화를 위해 조작·기동된 사건 수사에서 자백을 거부한 최 교수의 행동은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한 죽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진상규명위원회의 이

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문제가 여전히 진상규명의 걸림돌로 제기됐다. 진상규명위원회는 당시 최 교수를 담당 한 조사관들이 형법상 가혹행위와 상해치사,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지만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완성돼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의 필요성을 담은 권고안을 정부에 내기로 하는데 그쳤다. 또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박정희 대통령의 개입여부를 뚜렷이 밝히지 못해, 조사권을 갖지 못한 위원회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 이은경 사무처장은 "관련기관의 협조와 증언에만 의존해야 하는 규명위원회의 한계 때문에 조직적인 사실 은폐 등을 밝혀내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공소시효 배제를 통해 당시 사건을 맡았던 이들에게 사면권을 주지 않는 한 진실규명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최종길교수 공권력의해 사망”

의문사조사 판정 “민주화 관련성 인정”

1973년 간첩혐의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 의문사를 당한 최종길(崔鍾吉·사진) 서울대 법대 교수가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숨졌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중정의 고문과 협박 등 불법수사에도 불구하고 최 교수는 사망 때까지 강요된 간첩자백을 하지 않았다”며 “권위주의적 공권력 행사에 순응하지 않음으로써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행위 또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활동’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최 교수 죽음의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최 교수는 고문으로 의식 불명인 상태에서 수사관들에 의해 7층 비상계단에서 내던져져



사망했거나 고문으로 사망한 뒤 수사관들에 의해 자살로 위장되는 등의 수법으로 타살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직접 타살’이 아니라 허더라도 수사관들의 고문, 협박이 최 교수의 죽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 교수는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 행사로 숨졌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그러나 최 교수의 고문 및 사망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당시 중정 직원들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와 관련, 이들의 범죄가 행사

“공권력 행사로 최종길교수 사망”

의문사규명조사 결론 민주화운동도 인정

1973년 간첩혐의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다 숨진 최종길 서울대 교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망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교수는 중정의 고문과 협박 등 각종 불법수사에도 불구하고 강요된 간첩자백을 하지 않았다”며 “적극적 항거 외에 권위주의적 공권력 행사에 순응하지 않음으로써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행위도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활동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최교수 죽음의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본보 2001년 11월3일자 1면 보도) 진상규명위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25일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28일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최교수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최교수의 소극적 저항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것을 계기로 다른 의문사 진정사건들도 적극적 저항이 아니었더라도 사회적 반향 등을 고려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최교수 아들인 최광준 경희대교수(38)는 29일 국가를 상대로 유가족이 겪어야 했던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다. 김재중기자 jikim@kmib.co.kr

“의문사 최종길 교수 공권력에 의해 희생”

의문사, 민주화운동 인정

1973년 간첩혐의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던 중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 법대 최종길(崔鍾吉·당시 42세·사진)교수는 불법적인 공권력에 맞서다 희생됐으며 이에 따라 그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韓相範)는 27일 “위원 9명 전원이 최교수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숨졌으며 그의 사망이 민주화운동에 영향을 끼친 만큼 그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밝히고 최종결정문을 공개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중앙정보부가 73년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작된 반유신 시위에 맞서 위기의식을 조장하기 위해 해외간첩단 사건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최교수는 독일 유학시절의 동배를 연 여행경험이 문제가 돼 조사받다 숨졌으며 중앙정보부는 최교수 사망 직후 수사보고서·현장 검증기록 등을 위조, “최교수가 간첩임을 시인했으며 자책감으로 7층 화장실에서 투신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규명위는 이날 “최교수가 민주화운



동에 참여했다고 보긴 힘들지만 공안사건 조작기도에 맞서 고문에도 불구하고 항거했으며 그의 사망이 이후 사회적 저항의 계기가 된 만큼 그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규명위는 28일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최교수와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규명위는 최교수의 사인과 관련, “해외 법의학자 등의 소견으로 볼 때 최교수는 타살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최교수의 직접 사인이 고문사인지 추락사인지는 당시 중정 담당 수사관 金모(미국 거주)씨가 조사를 거부해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사건을 조작·은폐한 중정 관계자들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만료돼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할 방침이다.

남궁욱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독재폭력’ 국가차원 입증

최교수 타살 인정 의미

“의문사 1호”로 꼽혀왔던 최종길 교수의 죽음에 민주화운동과 관계가 있고,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발생했다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은 독재정권의 폭력성·부도덕성을 국가기관이 직접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진상규명위는 그러나 구체적인 타살 방법 및 경위, 죽음을 자살로 위장·은폐한 중앙정보부 지휘체계의 책임자를 명확하게 규명하지는 못했다.

*의미 최교수가 숨진 1973년은 박정희 정권이 장기독재를 위해 제정한 유신헌법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운동이 시작되던 시기였다.

진상규명위는 체제수호를 담당하던 중정이 명망가였던 최교수를 ‘간첩 공작대상’으로 선택하고 중정에 소환했다가 여의치 않자 고문을 자행했으며 이것이 죽음의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또 최교수가 비록 반체제 활동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지만 죽음에 이른 과정 자체가 유신체제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이었다고 포괄적으로 해석했다.

진상규명위가 민주화운동을 넓게 인정함에 따라 결정이 입박한 한층된 투



故 최종길교수

‘유신항거 죽음’... 민주화운동 포괄 해석 자살위장 책임자등 핵심규명 여전히 미궁

쟁국장 출신 김준배씨 사망사건 등 다른 진정사건도 ‘의문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계 진상규명위는 과거 중앙정보부와 검찰이 발표했던 ‘최교수는 자살했다.’는 수사결과를 모두 뒤엎었다. 그러나 누가 최교수를 ‘공작 대상’으로 선정했는지와 사건의 최정점에 누가 있

었는지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못했다. 민주화정신계승국민연대 이은경 사무처장은 “최교수 사건의 핵심은 타살 및 사건 은폐에 대한 중정의 조직적인 개입을 밝혀내는 것”이라면서 “총체적인 규명없이 의문사 인정 여부만 결정한 것은 미흡하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또 고문에 직·간접적

으로 참여한 당시 중정요원들에게 상해치사, 폭행,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상범 위원장은 “공권력이 저지른 반인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배제의 필요성을 담은 권고안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교수의 아들 최광준(38) 교수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예정이어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배제가 공론화될 전망이다.

*이창구기자 window@kdaily.com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을 조사해온 의문사진상규명위 조남관 조사과장이 27일 최교수가 사망할 당시의 중앙정보부 조직체도를 가리키며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

최종길교수 사망 '민주화' 인정

의문사 규명위 "위법한 공권력에 희생"

1973년 간첩 혐의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 의문사한 고 최종길 서울법대 교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숨졌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권력 핵심부의 위법성을 국가기관 스스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중정의 고문과

협박 등 불법수사에도 불구하고 최 교수는 사망 때까지 강요된 간첩자백을 하지 않았다"며 "의식적-적극적 항거 외에도 권위주의적 공권력 행사에 순응하지 않음으로써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행위 또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활동'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최 교수 죽음의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희균기자 belle@sgt.co.kr

대한매일

2002. 5. 28

최종길교수 '공권력에 희생'

진상규명위 최종 확정

지난 73년 간첩혐의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 숨진 최종길(崔鍾吉·당시 42세) 서울법대 교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희생됐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韓相範)는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 교수는 강제로 간첩자백을 받아내려던 중정의 불법수사에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면서 "적극적 항거 외에도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순응하지 않은 소극적인 저항 역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활동에 포함되는 만큼 최 교수의 죽음은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는 의문사"라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또 "최 교수는 고문으로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수사관들에 의해 7층 비상계단에서 내던져져 사망했거나 고문으로 사망한 뒤 수사관들

에 의해 자살로 위장되는 등의 수법으로 타살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비록 직접적인 타살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사관들의 고문이 죽음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숨졌다."고 덧붙였다.

진상규명위는 조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최 교수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를 요청했다. >관련기사 3면

진상규명위는 진정사건 85건에 대한 조사를 벌여 지금까지 모두 16건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 최 교수 사건 외에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의문사'로 인정된 경우는 84년 청송감호소에서 채소자 채우개선을 요구하다 숨진 박영두씨 사건과 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보안사에서 조사를 받다 숨진 임기운 목사 사건 등 2건이다.

이창규기자 window2@kdaily.com

美, 전투병력 파병 요청

국방부 "거절의사 전달"

국방부는 27일 아프가니스탄에서 대(對)테러 작전중인 미군측으로부터 한국군 전투병 파병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토미 프랭크스 미 중부사령관 등이 최근 한국군 연락단을 통해 보병·공병 등 국군 1개 중대와 지뢰제거장비 등의 파견을 요청해 왔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국회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전투병 등의 추가파병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군측에도 이 같은 의사를 완곡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군은 키르기스스탄에 90여명 규모의 의료지원단을 비롯, 공군 C-130 수송기 4대, 해군 전차상륙함(LST) 1척 등으로 구성된 수송지원단을 파견했다.

김경운기자 kkwoon@kdaily.com

국가 폭력이 빛은 의문사

고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의 죽음은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관련 직접 증거가 은폐되거나 유실돼 완벽하게 사인을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최 교수가 중앙정보부에 불법 연행돼 조사를 받던 1973년의 시대적 상황과 수집 가능한 정황 증거에 비추어 판단을 할 도리밖에 없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장기간 폭넓은 조사활동을 통해 최 교수가 고문치사당한 뒤 내던져졌거나 직접 타살이 아니더라도 수사관들의 고문 협박이 죽음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정했다. 진상규명위가 비록 직접적인 사인을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최 교수의 죽음에 불법적인 국가폭력이 개입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의미가 크다.

중앙정보부 남산 분청사 지하실에서 최 교수를 조사했던 수사관은 아직도 완강하게 '투신 자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말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더라도 그 시대의 최고 지식인이 죽음을 선택하도록 몰고간 절망과 공포도 바로 국가 폭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인 장기집권을 위한 유신체제는 지식인들의 저항과 반대를 짓누르는 과정에서 억울한 죽음과 슬한 인권유린을 낳았다. 유신치하에서 중앙정보부에 긴급조치 위반 또는 간첩 사건 등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피의자들은 한결같이 너무 굴욕적이고 고통스러워서 기억하기도 싫을 만큼 처절한 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한다.

수사 관계자들은 잠을 재우지 않은 것 외에 고문이 없었고 최 교수가 동베를린에 다녀온 것을 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잠을 재우지 않은 것도 명백한 고문행위이다. 유신시대 중정 지하실에서 최 교수만 '신사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고문은 인간의 심신을 극도로 무력하게 만들어 동베를린 구경을 못한 사람도 동베를린에 다녀온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

진상규명위가 최 교수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를 신청하기로 한 것은 억울한 죽음의 신원(伸冤)을 넘어 국가폭력의 과오를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

2002. 5. 28

"최종길 교수, 공권력에 의해 사망"

진상규명위 최종 결정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973년 간첩 혐의로 중앙정보부 남산 분실에서 조사받다 숨진 최종길(崔鍾吉·사진) 서울대 법대 교수가 당시 '간첩혐의를 자백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살했다'는 중정의 발표와는 달리 국가권력의 가혹행위에 의해 숨진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A29면에 관련기사



규명위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4일 51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위원 9인의 전원 찬성으로 최 교수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원대기자 yeon72donga.com
27일 오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남관 조사과장이 최종길 전 서울대 교수의 사망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권차원서 간첩조작 입증

최종길교수 의문사 인정

"30여년 동안 가려져 있던 진실의 한 꺼풀을 국가기관이 벗겨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서울대 법대 최종길(崔鍾吉) 교수 사건과 관련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27일 '의문사'로 인정한 데 대해 최 교수의 아들 최광준(崔光濬) 경희대 법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결정은 사건 당시부터 국가권력에 의한 타살 의혹이 제기됐지만 88년 검찰이 재조사를 했음에도 입증하지 못했던 사실을 이번에 최초로 국가기관이 공식 인정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유신정권 공작' 첫 규명

▽확인된 사실=규명위는 최 교수가 간첩 혐의로 조사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 유신정권의 국면전환용 공작 대상이었음을 확인했다.

반(反) 유신 시위가 격화돼 정권의 위기가 초래되자 이를 전환하기 위해 간첩사건을 조작하기로 했고 자수간첩의 제보에 최 교수가 연루되자 그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자수간첩의 제보는 "최 교수는 우익적 성향이 강해 공산혁명에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 뿐으로 증거가 무리

한 조사를 했다는 게 규명위의 실명이다. 최교수 사건의 모체격인 '유럽 거점 간첩단사건' 자체가 조작됐다는 규명위의 확인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 당시 수사라인의 지휘부에 있었던 간부 2명에게서 최 교수가 자살이 아니라 타살됐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타살 명확한 증거 못찾아

▽결정 과정과 한계=규명위는 결정 이전부터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였지만 최 교수의 죽음에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인정을 망설였던 게 사실. 이와 관련해 규명위는 간첩이라는 자백을 거부한 최 교수의 행위를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소극적 항거'로 봐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포괄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석했음을 보여줬다.

그러나 규명위는 타살의 정황은 대체로 입증해 냈지만 타살 행위 자체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 현행법상 공소시효 때문에 최 교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사건 관계자들에게 묻지 못한 점도 한계로 보인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사망원인 공권력"

[박충희 기자]

☞ 저속 | 고속

최 교수 명예회복 당연하다

고 최종길 서울법대 교수의 누명이 29년만에 벗겨졌다. 그 동안 최 교수의 공식 사인은 소위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과 관련, 조사를 받던 중 양심의 가책을 느껴 투신자살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7일 '최 교수가 의식불명 또는 숨진 상태에서 7층 아래로 던져져 자살로 위장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지었다. 때늦은 조치지만 정부가 과거 공권력의 잘못을 바로 잡고 최 교수의 명예를 회복한 것은 백 번 잘한 일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이 사건은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저지른 불법연행·고문·살인사건이다. 국정원은 "진상규명위의 조사활동에 100% 협조했다"고 하지만 일반의 신뢰를 받지 못한것같다. 마땅히 자기 조직의 전비를 먼저 조사하고 용기있게 스스로 고해했어야 했다.

인권에 최우선적 가치를 두었다는 이 정부에서조차 정보기관의 과거 죄과를 묻어두려 해서 될 말인가. '이미 퇴직한 사람은 민간인이라, 그들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변명은 공허할 뿐이다. 지난해 밝혀진 '수지 김 살해사건'에서 보았듯이 아직도 얼마나 많은 '조작 사건'이 감춰져 있을지 모른다.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름만 바꿀 게 아니라 먼저 자신의 죄과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이 기회에 공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만큼은 공소시효를 없애도록 해야 한다. 개인간의 범죄와 공권력에 의한 범죄는 그 성격이 판이하므로 똑같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게 할 수는 없다. 공소시효 폐지는 또한 구의원들에게 공권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시민단체들이 입법청원한 '반인도범죄 등의 시효에 관한 특별법'을 심의하기 바란다.

의문사 규명, 갈 길 멀다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다 숨진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에 대해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을 내렸다. 30년 가까이 은폐됐던 공권력의 만행을 국가기관 스스로 드러내 바로잡은 것은 다행한 일이다.

위원회가 이번 조사에서 최교수 타살의 직접적 증거는 밝히지 못했으나 중정 수사관의 고문, 곧 공권력에 의한 사망을 밝혀낸 것은 의미가 크다. 당시 자살로 처리된 최교수 사건이 이번 조사에서 중정 측의 고문사실 은폐, 각종 문서·현장 조작, 관련자 허위진술, 증거인멸 기도 등 타살의 정황이 입증된 데 따른 것이다. 최교수가 고문으로 사망한 뒤 창문 밖으로 내던져졌거나 직접 타살이 아니더라도 심한 고문과 모욕·협박이 죽음에 영향을 주었다고 본 위원회의 판단은 합당하다.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난데다 고문에 가담하거나 현장을 목격한 관련자 두명이 해외로 도주해 위원회의 조사를 극력 거

부하는 등 어려움 속에서 이 정도로 진상에 접근한 것도 큰 진전이다.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재작년 10월 출범한 위원회는 진정사건 78건·직권사건 5건 등 권위주의 정권 시절 공권력에 의한 억울한 죽음 83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하나 지금까지 16건 처리에 그치고 있다. 오는 9월 16일이 조사시한인 까닭에 경찰·군·국정원 등 피진정기관이 차일피일 미루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고 한다. 불행했던 과거를 바로잡는 일에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잘못된 과거를 밝히는 것은 비슷한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이지만, 의문사에 관련된 기관이나 당사자 대부분은 참회에 인색하다.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마음대로 해봐라"는 식이다. 이런 점에서 반인도적 국가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토록 특별법을 제정하지는 시민단체의 주장도 눈여겨볼 만하다.

최종길 교수 '죽음'이 남긴 숙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최종길 교수의 의문사를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죽음'으로 최종 결정했다.

1973년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투신 자살했다는 중앙정보부(국정원의 전신)의 발표를 정면으로 부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규명위는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에 최 교수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의문사의 의문이 온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규명위는 "중정 관계자들의 진술과 국내외 법의학자들의 소견을 종합하면 이미 숨진 상태에서 7층 아래로 던져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규명위가 그 '가능성'을 더 과해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의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목적이 정의의 회복에 있는 만큼, 진실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최 교수를

조사했던 중앙정보부 요원들 스스로 진상을 밝히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이는 공소시효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양심의 문제다.

만일 그들이 거부한다면 국정원이 나서서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오늘의 국정원은 과거의 중앙정보부와 크게 달라졌다고 하니 최 교수 사건에 마땅히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국정원 스스로 의지만 있다면 진실을 가려내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없다. 최 교수의 죽음을 부른 이른바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의 진상도 밝혀야 한다. 국민에게 안보위기를 부풀려 독재체제를 유지하려고 간첩단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문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최 교수의 죽음은 국회에도 숙제를 남겨주었다. 반인권적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이 그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두루 인권의 가치를 저마다 강조해 왔다. 그것이 진실이라면 입법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73년 유럽거점 간첩단사건 조작

의문사규명위 "간첩 없어... 박정희 정권 위기 탈출용"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는 고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가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의문사했다는 조사결과에서 최 교수가 연루됐다고 알려졌던 '유럽거점 대규모 간첩단사건'은 당시 중정에 의해 만들어진 조작극으로 드러났다고 29일 밝혔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재판을 통해 간첩으로 판명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면서 "당시 조직총책으로 지목된 이 모(네덜란드 유학생)씨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증거가 없어 유럽거점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중앙정보부는 1973년 간첩단 사건을

대대적으로 발표하면서 관련자 54명 가운데 3명은 미체포이고, 최 교수를 포함해 국내간첩 김 모씨 등 3명은 구속, 17명은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

특히 최 교수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관련자 가운데 누구도 최 교수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 없었고, 최 교수에 대한 추궁을 받은 사람도 없었다"면서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과 최 교수가 간첩이었던 1973년 발표는 조작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의문사규명위는 사건조작의 배경으로 "유신헌법을 공포한 지 1년도 채 못돼 1973년 중반 전국 대학가의 반유신시위 등으로 궁지에 몰린 박정희 정권이 이를 진압할 목적으로 학원사찰의 강도를 높이던 시기에 최 교수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아 위기를 탈출하려 했다"고 밝혔다.

최종길 교수 유족 국가에 손해소

73년 중앙정보부에서 의문사한 고 최종길 서울법대 교수의 유족들은 29일 국가와 당시 중정부장 이후락씨 및 수사관 차 모씨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중앙정보부 고문으로 숨졌음이 드러났다'며 '이 사건의 민사배상책임 소멸시효 5년이 지났지만 국가기관의 책임을 국가 스스로가 인정하

만큼 소멸시효 완성을 내세워 배상책임을 회피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등 사회단체들은 이날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촉구했다.

/연합

의문사유가족 국가상대 손해소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지난 83년 5월 보안부대에서 조사받다가 월북기도 혐의까지 받고 의문사한 이운성(성균관대 81학번)씨 유가족이 24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유가족은 이날 오전 서울지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법의 미비점, 위원회의 한계 등으로 군의문사 관련 사건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사법부의 권한과 민사소송절차상의 증인제도, 재판부의 석명권행사 등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진실 규명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양승규)는 지난 80년대 운동권 학생들을 강제로 징집,군에서 순화교육을 시킨 이른바 '녹화사업' 관련 의문사 5건을 조사중이며, 특히 최근 최근 이씨 사건 조사과정에서 월북기도 혐의가 당시 보안사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을 확인해주는 일부 사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sungjin@yna.co.kr (끝)



Yonhapnews Photo
지난 83년 5월 보안부대에서 조사받다가 월북기도 혐의까지 받고 의문사한 이운성(성균관대 81학번)씨 유가족 대리인인 박정관(故이운성씨의 막내매형)씨가 24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뒤 서울지법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70년대 유럽 간첩단
中情에 의해 조작”

의문사진상규명위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의문사한 고(故) 서울법대 최종길(崔鍾吉) 교수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던 '유럽거점 대규모 간첩단 사건'은 당시 중정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29일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이 사건은 단 한명의 간첩도 없는 조작극임이 드러났다"며 "당시 조직총책으로 지목된 이모(네덜란드 유학생)씨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증거가 없어 유럽거점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유럽거점 대규모 간첩단 사건은 유럽 유학이나 출장을 다녀온 학자와 공무원 등 54명이 유럽에서 북한 공작원과 연계, 간첩활동을 벌였다고 중정이 발표한 사건으로 당시 이 사건과 관련, 3명이 구속(이중 최 교수는 사망)되고 17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31명에 대해 경고가 내려졌다.

/이진희기자river@hk.co.kr

故최종길교수 유족

국가등 상대 10억 손해소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서 고문에 의해 숨진 것으로 밝혀진 고(故) 최종길 교수의 부인과 아들 등 유족 8명은 29일 "민주화 운동과 관련,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숨진 것으로 밝혀진 만큼 유족들이 입은 재산상,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이후락(李厚洛) 당시 중앙정보부장 등 수사관계자 15명과 국가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노원명기자narzis@hk.co.kr

최종길교수 죽음 부른 '유럽거점 간첩단사건' "간첩도 연루자도 없었다"

의문사규명위 "증정서 조작... '제2의 동백림사건' 기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29일 1973년 중앙정보부 조사 도중 숨진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던 '유럽거점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 당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많은 민간단체가 '실체 없는 사건'이라며 조작 의혹을 제기해 왔던 이 사건이 국가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조작됐다'고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규명위 김준곤 제1상임위원은 이날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당시 중정도 간첩 혐의자를 찾지 못했다"며 "이 사건은 결국 단 한명의 간첩도, 연루자도 없는 '조작사건'이라고 말했다.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이란, 유럽 유학이나 출장을 다녀온 학자와 공무원 등 54명이 유럽에서 북한 공작원과 연계해 간첩활동을 벌였다고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사건이다. 당시 최교수 등 3명이 구속되고 17명이 불구

속입건됐으며, 31명이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규명위 조사 결과, 간첩 혐의로 구속됐던 김장현(67·당시 경제기획원 산하기관 분석관)씨와 김춘명(사망·당시 농수산부 공무원)씨 등은 77년 간첩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동베를린에 다녀온 김장현씨만 잠입탈출 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규명위는 당시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대부분이 67년 '동백림(동베를린) 사건'의 미체포자인 이아무개(당시 네덜란드 유학생)씨와 연고가 있거나 접촉했던 사람들로, 중정이 이들을 모두 묶어 '간첩조직'으로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평소 유신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최종길 교수는 이씨와 제물포중·고교 동기생이라는 이유로 중정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 사건에 연루됐다. 그러나 간첩총책으로 지목됐던 이씨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증거가 없어 '유럽거점'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규명위는 밝혔다.

김장현씨는 "63년 해외출장 중 호기심으로 동베를린에 관광을 다녀온 것이 잠입탈출죄가 됐고, 유학생 친구에게 '경제백서'와 '경제지표' 등 공개된 자료를 준 것이 국가기밀누설죄로 둔갑했다"며 "당시에는 전철만 타면 서베를린에서 동베를린으로 쉽게 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준곤 상임위원은 "간첩단 사건이 발표된 73년은 유신반대 시위가 들끓었던 시기"라며 "이 때문에 중정은 제2의 동백림사건을 만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해정 기자 idun@hani.co.kr

최종길교수 유족 10억 소송

최 교수의 아들 광준(경희대 법대 교수)씨 등은 29일 '중정이 아버지를 숨지게 한 뒤 대규모 유럽간첩단 사건의 조직원으로 발표해 막대한 물질·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당시 중정 수사관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73년 유럽간첩단사건은 조작"

실체 없는데도 中情서 "최종길교수 연루"

의문사규명위 재조사 발표

지난 73년 옛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의문사한 고 서울대법대 최종길 교수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던 '유럽거점 대규모 간첩단사건'은 중정이 조작한 것이라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29일 밝혔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이날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이 사건은 한명의 간첩도 없는 '조작극' 임이 드러났다."며 "조직총책으로 지목된 이모(네덜란드 유학생)씨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증거가 없어 유럽거점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유럽유학이나 출장을 다녀

온 학자, 공무원 등 54명이 유럽에서 북한 공작원과 연계, 간첩활동을 했다고 중정이 발표한 사건으로 당시 최교수 등 3명이 구속되고 17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진상규명위는 "이 사건에 연루된 인사 대부분이 67년 간첩단 사건인 '동백림 사건'의 미체포자인 이씨와 관계 있는 이들로 중정은 이들을 모두 '간첩조직'으로 조작했으며 최교수도 이씨의 중·고교 동창생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 사건에 연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이창구기자 window2@kdaily.com

최종길교수 유족, 국가상대 손해배상

지난 73년 중앙정보부에서 의문사한 고 최종길(崔鐘吉) 서울법대 교수의 아들인 경희대 법대 교수 최광준(崔光濬)씨 등 유족들은 29일 국가와 당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씨와 수사관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 사건의 민사배상책임 소멸시효 5년이 지났지만 국가기관의 책임을 국가 스스로가 인정하면 만큼 소멸시효의 완성을 내세워 배상 책임을 회피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kdaily.com

“유럽거점 간첩단은 없었다”

의문사규명위 '최종길교수 연루' 中情조작 밝혀

崔교수유족 10억 손배소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의문사한 서울대 최종길 법대 교수가 연루된 것으로 발표됐던 '유럽거점 대규모 간첩단 사건'도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29일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은 단 한명의 간첩도 없는 조작극으로 드러났다”며 “당시 조직총책으로 지목된

네덜란드 유학생 이모씨가 북한공작원이라는 증거가 없어 유럽거점 간첩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중정이 유럽 유학이나 출장을 다녀온 학자와 공무원 등 54명이 유럽에서 북한 공작원과 연계해 간첩활동을 벌였다고 발표한 사건으로 3명이 구속(최교수는 사망)되고 17명이 불구속입건됐다.

한편 최교수의 아들 광준씨(경희대 법학과 교수) 등 유족들은 이날 국가와 이후라 당시 중정부장, 주무수사관 차모씨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유족들은 “의문사진상규명위 조사결과 최교수가 중정의 고문으로 숨졌음이 드러났다”며 “국가기관이 이를 인정할 만큼 민사배상 책임 소멸시효(5년)가 지난 점을 들어 배상책임을 회피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배정수기자

조작으로 드러난 간첩단 사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1973년의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이 당시 중앙정보부에 의한 조작극으로 판명됐다. 수지깎 피살 사건에 이어 정권 안보를 위해서는 무고한 국민을 거리낌없이 간첩으로 만든 독재시대 권력기관의 추악한 모습을 거듭 확인하게 돼 참담하다.

'유럽 간첩단 사건'이 중정의 조작이라는 것은 이 사건에 연루시키려 했던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의 의문사가 고문살해로 판명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다. 유럽 유학이나 출장을 다녀온 학자와 공무원 등 54명이 67년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의 미체포자인 이모(네덜란드 유학생)씨와 관계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처리됐으나 이씨가 북한 간첩이라는 증거가 없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최교수 의문사가 재조사되지 않았다면 이들은 지금도 누명을 벗지 못했을 것이다.

의문사규명위가 장준하 선생과 최종길 교수 등 일부 의문사의 진상을 밝혀냈지만 정보기관과 수사기관들이 여전히 자료제출 거부 등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가 강제 수사권이 없고 활동시한도 오는 9월16일까지로 돼 있는 탓이다. 그러나 이번에 의혹 사건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넘어가면 재차 청산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공권력의 횡포에 희생된 이들의 명예회복 없이 어떻게 역사를 바로잡고 국민 화합을 이룰 수 있겠는가.

현 상태로는 의문사 규명작업이 광복 후 반민특위의 실수를 되풀이할 우려가 있다. 의문사 규명위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활동시한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국가 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종길교수 연루 조사 유럽간첩단사건은 조작”

의문사진상규명위 밝혀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의문사한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던 유럽거점 대규모 간첩단사건은 당시 중정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가 29일 밝혔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단 한명의 간첩도 없는 조작극임이 드러났다”며 “당시 조직총책으로 지목된 이모씨(네덜란드 유학생)가 북한공작원이라는 증거가 없어 유럽거점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유럽거점 대규모 간첩단 사건은 유럽 유학이나 출장을 다녀온 학자와 공무원 등 54명이 유럽에서 북한공작원과 연계, 간첩활동을 벌였다고 중정이 발표한 사건으로 당시 이 사건과 관련, 3명이 구속(이중 최교수는 사망)되고 17명이 불구속입건, 31명에 대해 경고가 내려졌다. 진상규명위는 “당시 이 사건에 연루된 인사 대부분이 1967년

간첩단 사건인 동백림 사건의 미체포자인 이씨와 관계된 이들로 중정은 이들을 모두 간첩조직으로 조작했으며 최교수도 이씨와 중·고교 동창생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에 연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김재중기자

최종길교수 유족

국가상대 손배訴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의문사한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의 아들 최광준씨(경희대 법학과 교수) 등 유족들은 29일 국가와 당시 중정부장 이후라씨 및 수사관 차모씨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최교수가 중앙정보부의 고문으로 숨졌음이 드러났다”며 “이 사건의 민사배상책임 소멸시효 5년이 지났지만 국가기관의 책임을 국가 스스로가 인정한 만큼 소멸시효 완성을 내세워 배상책임을 회피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승철기자

“유림거점 건설만은 크고다”
 “사조 루한 수도살종체”
 “쑤조 은선서삼삼삼삼유

【서울 15일 특파원 특보】 유림거점 건설만은 크고다. 사조 루한 수도살종체. 쑤조 은선서삼삼삼삼유. 유림거점 건설만은 크고다. 사조 루한 수도살종체. 쑤조 은선서삼삼삼삼유. 유림거점 건설만은 크고다. 사조 루한 수도살종체. 쑤조 은선서삼삼삼삼유.

주유 수도살종체
 龍和寺 和善抄

【서울 15일 특파원 특보】 주유 수도살종체. 龍和寺 和善抄. 주유 수도살종체. 龍和寺 和善抄. 주유 수도살종체. 龍和寺 和善抄. 주유 수도살종체. 龍和寺 和善抄. 주유 수도살종체. 龍和寺 和善抄. 주유 수도살종체. 龍和寺 和善抄.

【서울 15일 특파원 특보】 주유 수도살종체. 龍和寺 和善抄. 주유 수도살종체. 龍和寺 和善抄. 주유 수도살종체. 龍和寺 和善抄. 주유 수도살종체. 龍和寺 和善抄. 주유 수도살종체. 龍和寺 和善抄.

龍和寺 和善抄

【서울 15일 특파원 특보】 龍和寺 和善抄. 龍和寺 和善抄. 龍和寺 和善抄. 龍和寺 和善抄. 龍和寺 和善抄. 龍和寺 和善抄. 龍和寺 和善抄. 龍和寺 和善抄. 龍和寺 和善抄. 龍和寺 和善抄.

이내창 사건 관련 보도

● 이내창씨 의문사, 드러난 의혹과 진상조사 전망

목격자 진술 · 증거사진 조작 결론

의문사규명위 “상처 주변환경 고려, 실족익사 아니다”

송화선 기자 hsahn@naeil.com

14년간 의문사로 남아있던 고 이내창씨의 사인 확인에 단서가 될 수 있는 목격자 진술과 당시 증거로 제시된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로써 학생운동 관련 대표적 의문사로 지적돼 온 이내창씨 사망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사건 개요= 이내창씨는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하던 89년 8월 15일 전남 여천군 삼산면 거문도 유람해수욕장 주변 바닷가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이 사건은 숨진 이씨가 아무 연고도 없는 거문도에서 온 몸에 상처를 입은 상태의 주검으로 발견됐다는 점에서 발생 당시부터 의혹을 샀다. 특히 이씨의 동료들은 이씨가 임수경씨 대신 8·15 평양축전에 전대협 대표로 파견될 것이 검토됐던 인물로 정보기관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며 그의 죽음에 공권력이 개입됐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씨 사망 직후 진상 조사를 위해 거문도를 찾은 당시 중앙대 의대 장임원 교수 등이 주민들로부터 이씨가 사망직전까지

안기부 직원 도 모씨와 동행했다는 진술을 얻어내면서 의혹은 확대됐다. 거문도의 다방 종업원 최 모씨는 이씨가 도씨와 함께 다방에 들어와 불안한 모습으로 차를 마신 후 다른 남자 한 명과 같이 나가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고, 나뭇배 선장이 모씨는 이씨의 배삯을 도씨가 내는 등 3명이 동행으로 배를 타고 유람해수욕장에서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이 여수경찰서의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전면 부인하면서 사건은 단순 실족사로 종결됐다. 당시 여수경찰서는 이씨가 혼자 거문도를 찾아와 해변을 걷다가 발을 헛디뎠어 물에 빠졌으며 뾰족한 바위 등에 부딪쳐 정신을 잃은 후 익사해 온 몸에 상처가 생겼다고 발표했다. 안기부도 도씨가 이씨와 동행한 바 없다고 주장, 사건은 '의문사'로 남았다.

◇제기되는 의혹들= 이씨의 사체는 상의가 벗겨지고 허리띠가 풀린 채 하지만 입은 모습으로 발견됐다.

이와 관련 유족들은 “당시 이씨의 바지는 허리띠를 채우지 않으면 입고 걷기 어려운 ‘기지 바지’ 종류였다”며 “이씨를 그곳까지 끌고 간 기관원들이 도주를 막기 위해 허리띠를 빼앗고 이씨에 대한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상의를 숨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의 부검에 참여했던 당시 중앙대 의대 장임원 교수는 “바위에서 떨어졌다면 상처가 한 방향으로 나아하는데 곳곳에 출혈이 다양하게 나타났고, 특히 머리 부분에 상당히 큰 상처가 있었다”며 “이씨의 손에 아무 상처가 없다는 점도 이씨가 의식을 잃은 채 물에 빠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장과 전망= 이씨의 사망을 ‘단순 실족사’로 보기 어려운 증거들이 드러나면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이씨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당시 사건 조사에 참여한 안기부와 경찰, 검찰 수사라인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의문사규명위원회는 안기부에 당시 사건 관련 기록을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또 여수경찰서 사건 조사 기록과 당시 학생운동 관련 정황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문사규명위 조사 1과 신명철(42) 팀장은 “이씨 사건이 공권력에 의한 살인으로 밝혀질 경우 당시 안기부 관련자 등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89년 변사체로 발견된 이내창씨

사망직전 안기부직원 동행”

의문사추 목격자진술로 추정

1989년 8월 15일 전남 여수 거문도 앞바다에서 변사체로 발견돼 의문사 논란을 일으켰던 전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이내창(당시 27세)씨가 사망직전까지 안기부 직원으로 추정되는 여성등 일행 2명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10일 이 사건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씨의 사체가 발견된 날 발견장소 부근에서 2시간차를 두고 남녀 2명과 남자 2명을 각각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의문사규명위는 목격자 진술과 여러 정황증거등에 따르면 남녀 2명은 당시 안기부 인천분실 여직원 A씨와 A씨의 남자친구 B씨로 추정되며, 남자 2명은 이씨와 B씨가 확실시된다고 설명했다.

의문사규명위 김형태 상임위원은 “이번에 새로 확보된 목격자 진술 외에 당시 안기부 여직원 A씨와 남자친구 B씨가 거문도 유립해수욕장에 이씨와 함께 갔었다는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이들은 이씨와 그 동행인들로 확실시 된다”고 말했다.

의문사규명위는 또 ▲유립해수욕장에 이씨 사망 전후 기관원 7명이 있었던 점 ▲이씨가 거문도에서 누군가에 쫓겨 급히 피신한 점 ▲여수에서 거문도로 가는 배안에서 이씨에 대한 감시자가 있었던 점 등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김충남기자 utopian21@munhwa.co.kr

“이내창씨도 타살 가능성”

죽기전 공안요원들 접촉...상처도 맞은 듯

의문사위 확인... 자료협조 촉구

1989년 8월15일 거문도 유립해수욕장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당시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이내창씨(당시 27)는 공안기관에 의해 타살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해 국가정보원에 1989년 당시 이씨 등 학생운동권에 대한 내사기록을 요청하는 등 공안기관의 적극적인 자료협조를 촉구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씨가 죽기 이틀 전인 13일

서울시경 형사라고 밝힌 남자 2명이 가스총과 수갑을 소지한 채 유립해수욕장에서 야영한 뒤 16일 오전 거문도를 빠져나간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며 “15일에도 대전서 형사라고 자칭하는 5명이 거문도에 들어갔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당시 이씨와 같은 배로 거문도로 갔던 국가안전기획부 인천분실 소속 여직원 A씨가 사망 전날 거문도 모 다방에서 이씨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던 것으로 확인돼 이씨의 죽음에 안기부 등 수사기관들의 개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씨가 임수경씨의

방복에 맞춰 전국민족미술운동연합(민미련)과 민족해방운동사 대형결개그림 제작에 함께 참여한 것에 대해 당시 안기부가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거문도에 있었던 수사관들의 인적사항 등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이 당시 학생운동권 내사자료 등 광범위한 관련자료를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당시 경찰이 발표한 이씨의 실족추정지점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수심이 1.5m 미만인 점 등으로 미뤄 실족 의사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며 “이씨의 죽음에 결정적 원인이 된 머리상처는 바위에 부딪힌 것 이라기보다는 가격에 의한 중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이씨가 학생운동에 회의를 느껴 혼자서 거문도 여행을 떠난 뒤 유립해수욕장 인근에서 실족해 바닷물에 빠져 숨졌다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유족은 이씨가 임씨의 방복 파트너로 거론된 데다 민미련 조직 사건에 연루돼 공안기관의 추적을 받던 중 숨진 사실로 미뤄 타살 가능성이 높으며 2000년 12월 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강영수 이학준기자 nomad@kmib.co.kr

이내창 사건 국정원 협조해야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이내창씨 타살 의혹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낸 것은 억울한 죽음의 진상에 한발 다가섰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위원회는 타살 여부와 주체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으나, 1989년 사건 발생 당시 이미 타살 의혹이 제기됐고, 안기부와 경찰의 개입 흔적이 곳곳에서 감지된 바 있다. 특히 사건 현장에 안기부 직원이 동행했다는 사실을 최초로 보도한 <한겨레>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는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했거나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한 의문사 사건 83건 가운데 현재 65건을 조사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미 십수년이 지난 사건들이어서 진상을 밝히는 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들고 있다. 관계기관이나 관련자가 선의로 제공하는 자료와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만큼 조사의 한계가 너무도 분명하다. 이내창씨 사건만 하더라도 국정원과 경찰이 협조를 하지 않는

다면 그 진상을 밝히는 일은 대단히 어려워 보인다. 위원회가 활동시한을 10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의문사 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만사지탄이 있거나 꼭 필요하다고 본다. 위원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해 위원회가 강제구인, 압수수색, 통신 제한권 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최장 15개월까지로 연장돼 있는 조사기간을 위원회 활동시한까지라도 연장해야 한다. 수사 경험이 풍부한 조사인력의 추가 배치도 필요하다. 법 제정 취지대로 진정한 국민 화합과 민주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도 의문스런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법 개정 이전 상황에서 이내창씨 사건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국정원이 과거의 안기부 관련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의문사의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 짓은 원혼의 호소를 땅에 묻고 당사자와 유족들에게 다시 죽음을 안기는 또다른 범죄 행위다.

“이내창씨 타살 가능성”

의문사규명위, 실족익사 89년 수사발표 뒤집어

“안기부직원 동행·기관원 10여명 현장체류”

사고지점 실족사 어렵고 머리상처도 의혹

지난 1989년 8월 전남 거문도 유립해수욕장 앞 바닷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중앙대 총학생회장 이내창(당시 27·사진)씨는 ‘실족에 의한 익사’라는 당시 수사결과와는 달리 타살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건 당시 거문도에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와 경찰 등 기관원 10여명이 있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씨 사망과 관련해 당시 발표된 수사결과에서는 사고지점 수심을 3m 이상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조사 결과 1.5m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실족했다는 지점 주변의 바위 상태 역시 전혀 미끄럽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는 등 당시 수사결과와 허점이 상당부분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형태 제1상임위원은 “당시 수사결과 실족 추정지점은 암석지대로,

해수면 위로 돌출돼 있는 주변 바위들로 인해 수영을 잘하는 이씨가 실족해 물에 빠졌더라도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지점”이라며 “주검에 대한 법의학적 감정결과 역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익사했을 때와는 달리 한정된 장기에서만 바닷물 성분이 검출되는 등 ‘비전형적 익사’라는 소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대한외상학회는 이와 관련해 “사고지점의 바위상태는 모난 데가 없이 전부 동글동글해 실신에 이를 정도의 중상으로 나타난 12×6cm 크기의 두피박탈 및 피하출혈을 동반한 오른쪽 앞머리 손상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임에 따라 사고 지점에서는 실족 익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감정했다.

이에 따라 규명위는 이씨를 포함한 학생운동에 대한 당시 안기부의 내사 기록이 사망원인을 밝혀내는 데 핵심이라고 보고, 지난 7일 신건 국정원장에게 기록공개를 요구했다.



당시 논란이 됐던 안기부 직원의 거문도 현지 동행여부에 대해서도 규명위는 이씨 혼자 거문도에

갔었다는 당시 수사결과를 뒤엎고, “이씨가 숨지기 전 안기부 직원 도아무개(36)씨와 함께 다방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는 당시 현지 다방종업원 최아무개(33)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최씨는 1·2차 경찰 진술에서 “도씨와 이씨가 다방에서 차를 마셨다”고 진술했다가 3차 진술에서는 “사람을 착각했다”고 말을 바꾼 바 있다.

규명위 관계자는 또 “이씨가 죽기 이틀 전인 13일 서울시경 형사라고 밝힌 남자 2명이 가스총과 수갑을 소지한 채 유립해수욕장에서 야영을 한 뒤 사고 다음날인 16일 거문도를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대전 경찰서 형사라고 자칭한 5명이 사건 당일인 15일 거문도에 들어갔던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고 말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국정원의 자정 결의

국가정보원이 지난 8일부터 국실별로 자정결의대회를 열면서 지난 과오를 국민에게 사과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고 한다. 진승현-정현준게이트 등 각종 게이트와 수지 김 살해사건의 조작-은폐에 국정원 간부들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국정원이 자숙과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평가할만한 일이다.

우리는 국정원이 지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정도를 걸어가겠다는 다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싶다.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결의가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 국가 최고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의 임무와 사명은 막중하다. 특히 남북관계가 유동적인 현 상황에서 국정원의 기능은 긴요하다. 국정원이 조속히 정상화되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게 되길 바란다.

우리는 금후 국정원의 자정-쇄신 프로그램에 기대를 걸고 싶다. 그렇지만 국정원이 다짐한 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결의대회 이후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국정원 직원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각종 게이트에 대해 자체 감찰-조사를

통해 한점 의혹도 없이 밝혀내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다.

청와대 등 권력의 핵심부에까지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윤태식게이트 등 각종 게이트에 얽힌 국정원의 연결고리를 스스로 밝혀내야 한다. 또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와 1989년 거문도에서 발생한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이내창씨 변사사건 등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등의 연루 의혹이 큰 의문사의 재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국정원은 모든 의문사와 의혹사건 관련자료를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에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자체 조사에 나서야 한다.

국정원이 진정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부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중앙정보부, 안기부 시절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국정원이 관련된 모든 의혹사건을 정리해야 한다. 당장의 위기모면과 조직보호를 위해 또 다시 진실을 은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국정원이 앞으로 뼈를 깎는 각오로 자정과 비리 척결, 혁신을 하지 않을 경우 조직 자체에 위기를 자초할 뿐 아니라 국가에 큰 불행이 될 것이다. 껌질이 깨지는 아픔을 겪어 새모습의 국정원을 기대한다.

이내창씨 타살의혹

사망직전 안기부 女직원동행 드러나

의문사규명추 제기

1989년 8월15일 전남 거문도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이내창(당시 26세·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씨는 당시 실족에 의해 익사했다는 수사당국의 발표와 달리 타살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1년여에 걸친 조사과정에서 이씨의 죽음과 관련된 새

로운 정황이 나오고 관련자들의 진술번복이 확인되는 등 당시 수사결과가 상당부분 거짓임이 밝혀졌다"며, "당시 안기부 직원 등이 이씨의 거문도행에 동행한 사실과 사건발생 장소에 경찰관이라고 밝힌 다수의 남성들이 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거문도의 한 다방종업원은 "이씨가 안기부의 여직원인 도모씨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김희균기자 belle@sgt.co.kr

실족사아닌 타살 가능성

의문死규명위 "의식 잃은후 물에 빠져" 안기부직원 동행... 부근에 기관원 7명

1989년 전남 여천군 삼산면 거문도 해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이내창(李來昌·당시 27세·사진) 전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이 실족사에 의한 익사라는 수사결과와는 달리 타살의혹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건 당시 안기부 직원이 동행했고 현장부근에 적어도 7명의 기관원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梁承圭)는 10일 '이내창 진정사건 관련 중간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거문도에서 3개월간 탐문을 실시하는 등 1년 여의 조사를 통해 경찰이 발표한 수사결과가 상당부분 거짓이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당시 이씨의 부검결과를 재검정한 결과, 장기 중 일부부



에서만 플랑크톤이 발견되는 등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물에 빠져 익사했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씨 머리에 12x6cm의 피하출혈이 있는 점도 직접적 사인인 익사 이전에 심한 외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논란이 돼 온 당시 안기부 직원의 동행여부에 대해 규명위는 이씨 혼자 거문도에 갔다는 수사결과를 뒤엎고 사건 당시 거문도의 한



다방에서 근무했던 최모(여)씨로부터 이씨가 안기부 여직원인 도모씨와 함께 다방에서 한참동안 얘기를 나눴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최씨는 "당시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유는 도씨의 간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건 발생일(8월15일) 이틀전에 '형사'라고 밝힌 남자 2명

이 사건현장 부근에서 야영하고 있었으며 사건 당일에도 역시 형사라고 밝힌 남자 5명이 거문도에 들어와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상규명위는 이씨가 거문도로 향하는 배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 같았으며, 배에서 내린 직후 민박집에 들어와 합금히 뒷문으로 도망갔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씨의 셋째 형 이내정(李來鼎·45)씨는 "당시 안기부가 사건을 주도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속속 나타나는데도 국정원이 비협조적 자세를 보이는 것은 역사에 두 번 죄를 짓는 것"이라며 "전향적 자세로 규명위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호소했다.

/정영모기자young5@hk.co.kr

“89년 변사체 발견 이내창씨 사망직전 안기부직원 동행”

의문사규명위 확인

1989년 전남 거문도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이내창씨(당시 26세)가 사망 직전까지 안기부 직원과 함께 있던 사실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확인됐다. 또 이씨가 경찰 소견에서 단순의사로 나온 것과는 달리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물에 빠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법의학적 소견도 나왔다.

이에 따라 당초 이씨가 혼자 여행을 갔다가 실족해 의사한 것이라는 경찰 수사는 거짓으로 밝혀졌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안기부 직원 동행여부에 대해 사건 당시 거문도 한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최모씨(여)로부터 이씨가 안기부 직원 도모씨와 함께 있었다는 진술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또 사건 당일 사건장소 부근에서 남녀 4명을 목격했으며

이씨로 보이는 사람이 이들 중 한명과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당시 관광객의 증언도 확보했다. 진상규명위는 또 ▲사건발생일을 전후해 기관원으로 보이는 남자 7명이 거문도에 체류했으며 ▲여수에서 거문도로 향하는 배 안에 이씨에 대한 감시자가 있었다는 사실 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당시 수사기관이 사망 원인으로 밝힌 '실족에 의한 의사'에 대해 진상규명위는 이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의사했을 때와 달리 폐안에서만 바닷물이 나오는 '비전형적 의사'를 했다는 법의학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 김형태 상임위원은 “아직 자살·타살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안기부가 어떤 형태로든 개입했다는 판단에 따라 국정원에 안기부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jbravo@kyunghyang.com

“의문사 이내창씨 타살 가능”

진상규명위 중간 발표

1989년 8월15일 전남 거문도 유립해수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이내창씨(당시 26·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는 타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0일 '이내창 의문사 진상조사 중간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안기부 직원이 이씨와 동행했고 거문도에 기관원으로 보이는 다수의 남자들이 목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수사기관이 사망 원인이라고 밝힌 '실족에 의한 의사' 부분과 관련하여 진상

규명위는 “사고 현장의 바위는 미끄럽지 않았고 수심이 1.5m 미만이었으며, 법의학 감정 결과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의사했을 때와는 달리 폐에서만 바닷물 성분이 나타나는 등 ‘비전형적 의사’라는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이씨 죽음의 결정적인 원인인 머리 상처는 바위에 부딪힌 것이라기보다는 외부의 가격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돼 왔던 안기부 직원의 동행여부에 대해 진상규명위는 이씨 혼자 거문도에 갔다는 89년의 수사결과를 뒤엎는 “이씨가 안기부 인천분실 여직원 도모씨와 함께 있었다”는 진술을 사건 당시 거문도 삼초

방에서 근무했던 최모씨(여)로부터 받아냈다.

공안기관의 개입 여부와 관련하여 진상규명위는 “이씨가 죽기 이틀 전인 13일 서울시경 형사라고 밝힌 남자 2명이 가스총과 수갑을 가진 채 유립해수욕장에서 야영한 뒤 16일 오전 거문도를 빠져나간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15일에도 대전경찰서 형사라고 자칭하는 5명이 거문도에 들어갔다는 주민들의

진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이씨가 거문도로 향하는 선박에는 선박에서 남자 3명으로부터 감시당하는 것 같았으며 배에서 내린 직후 민박 집에 들어와 황급히

뒷문으로 도망갔다는 당시 목격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임수경씨의 방북에 맞춰 북한으로 밀반출된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 제작에 이씨가 참여한 것에 대해 안기부가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국가정보원은 거문도에서 이씨를 감시하고 추적한 기관원들의 인적사항과 이씨에 대한 내사자료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진상규명위의 요청에 따라 27건의 자료를 보냈다”면서 “앞으로도 진상규명에 필요한 내부자료가 발견되면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규기자 window2@kdaily.com

89년 8월 14~15일 이내창씨 행적

8월 14일	
11:00	중앙대 안성캠퍼스로 남녀 2명 찾아와 대화
8월 15일	
08:30~12:50	신영 해리호 2층 선실 감시자 3명 목격
13:00	거문도 도착 직후 민박집 주인, 도박
14:00	의문사당서 일행들과 부엌방 방문
15:00	삼초다방서 안기부 여직원과 대화, 동행
15:30	남녀 2명과 유립해수욕장으로 갈
16:30	연식자대에서 남자 2명 심각한 대화 목격
18:00	연식자대에서 남녀 2명 목격
19:30	유립해수욕장 자갈밭에서 사체 발견

89년 단순사고死 결론 이내창씨

사망직전 안기부직원 동행

의문사委 “진술 확보... 타살여부 조사”

1989년 8월 15일 전남 거문도 앞바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이내창(李來昌·당시 27세·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씨가 사망 추정지점까지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직원과 동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당시 관할 여수경찰서가 단순 사고사로 결론지었던 **李씨**의 죽음에 안기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李씨의 사인을 조사해온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梁承奎)는 10일 중간 발표에서 “**李씨**가 당시 안기부 여직원 **都모씨** 등 두명과 거문

도까지 함께 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들이 당시 함께 차를 마신 거문도 한 다방의 여종업원 **崔모씨**와 **李씨** 시체 발견 한시간 전쯤 이들의 대화장면을 목격한 주민 차모씨를 포함, 이들의 동행을 입증할 만한 목격자들의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都씨**는 경찰에서 ‘거문도에는 친구들과 여행차 갔을 뿐’이라며 증거물로 역시 거문도에서 자신은 빠진 채 친구들끼리만 찍은 사진을 함께 제출했지만 이번 조사 결과

都씨 사진의 그림자는 친구들 사진의 그림자와 방향이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때문에 **都씨** 사진이 촬영된 시간이 친구들 것보다 시간상 4시간 정도 뒤에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찰의 수사결과를 부정했다.

위원회는 또 “**李씨** 사망 추정지점의 바위들이 심쪽할 만큼 미끄럽지 않은 데다 수심도 깊지 않았다”며 “모든 장지에서 물이 발견되는 일반적인 의사체와는 달리 **李씨**의 시체에선 폐에만 물이 차 있어 ‘비전형적’ 의사로 보이는 만큼 타살여부를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궁욱**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의문사 이내창씨 안기부원과 동행

진상규명위 “사고당시 상황 수사발표와 달라”

89년 8월 15일 전남 거문도 유립해수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이내창(李來昌·당시 27세·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씨가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직원과 동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김형태**(金

炯泰) 제1상임위원은 10일 ‘이내창 의문사 진상조사’에 대한 중간발표를 통해 “(안기부 여직원과의) 동행 여부를 입증하는 진술을 확보하고, 경찰 수사 결과와 배치되는 사실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이씨가 거문도에 간 이유를 밝혀줄 결정적인 단서였던 안기부 직원의 동행 여부와 관련해 “거문도 다방에서 일한 **최모씨**(여)에게서 이씨가 안기부 여직원 **도모씨**와 함께 있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사건 당시 경찰 수사에서 동행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한 것과 관련해 “당시 너무 많은 사람이 질문해 피하고 싶었다”고 진술 번복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은 전했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89년 거문도서 의문사 이내창씨 사망 직전 안기부직원 만나”

당시 목격자 진술 확보 단순실족사 아닐 가능성

지난 1989년 전남 거문도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내창(당시 26세·사진)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이 사망 직전까지 안기부 직원과 함께 있었으며 단순 실족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나왔다.

대통령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梁承奎)는 10일 “당시 거문도의 한 다방에서 이씨가 안기부 여직원 A씨와 이야기를 나눴고, A씨의 남자친구도 같이 있었다는 다방 여종업원 **최모씨**의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89년 경찰 수사에서 이같이 진술했다가 “본 적이 없다”고 번복했었다.

규명위는 또 이씨 사망일(8월 15일) 이를 전인 13일부터 경찰 2명이 이씨가 죽은 해수욕장 부근에서 야



영을 하다 사고 다음날 섬을 나갔다는 주민 증언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목격자들에게 따르면 이씨는 여수에서 거문도로 향하는 배 위에서

남자 3명에게 감시를 당하는 것 같았으며, 배에서 내린 직후 민박집에 들어갔다 훗날 뒤문으로 도망가는 등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했다는 것이다.

실족사 가능성과 관련해 규명위원회는 “이씨가 사망한 거문도 유립해수욕장 부근 암석은 미끄럽지 않고 수심도 1.5m에 불과해 익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서 “사체(死體) 부검 결과 일부 장기에서만 바닷물 성분이 나온 것으로 보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익사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鄭佑相기자 imagine@chosun.com

국정원 "이내창사건 규명 지원"

(서울=연합뉴스) 윤동영기자 = 국가정보원은 10일 지난 89년 변사체로 발견된 이내창씨의 실종 당시 안기부 직원이 동행한 것으로 의문사진상규명위가 발표한 것과 관련, "국정원은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규명위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진상규명에 필요한 내부자료가 추가 발견되는 대로 계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공보관실은 이날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이내창 사망사건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 "국정원은 이내창 사망사건 진상이 명확하고 신속히 규명돼 한정의 의혹도 없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원은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지난해 10월 출범한 이후 규명위의 요청에 따라 이내창 사망사건에 대해 3회에 걸쳐 총 27건(82쪽 분량)의 자료를 지원, 철저한 조사활동이 이뤄지도록 협조해왔다"고 덧붙였다.

ydy@yna.co.kr

(끝)

<국정원 의문사해결 협조 관심>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지난 89년 전남 거문도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이내창 당시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사망 사건에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중앙정보부 조사 중 타살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종길 교수에 이어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 정보기관의 행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양승규)는 10일 이내창씨 의문사 진상규명에 대한 중간결과 발표에서 89년 당시 수사 결과와는 달리 이씨가 안기부 여직원과 거문도에 동행했음이 목격자 진술을 통해 확인됐으며, 기관원으로 보이는 다수의 남성들이 사건 당시 거문도에 머물렀던 사실도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시 안기부가 이씨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안기부의 후신인 국가정보원이 관련 자료를 갖고 있는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73년 당시 남산 중정 조사실에서 조사도중 숨진 최 교수의 죽음과 관련, 중정의 내부 감찰자료에 최 교수에 대한 고문사실과 관련자에 대한 징계사실이 기록돼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 이씨 사건에서 안기부의 '공작'이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든 관련자료가 남아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들이 사건 핵심에 접근하지 못한 70년대 재야운동가 장준하 선생과 이씨 의문사 등과 관련, 최근 국정원장을 만나 자료협조를 요청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이내창 추모사업회와 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씨의 죽음에 안기부가 상당 부분 관련됐음이 입증된 만큼 중정과 안기부의 후신인 국정원은 의문사의 전말을 밝혀 줄 결정적 자료를 진상규명위와 국민앞에 공개하라"며 국정원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상규명위의 한 관계자는 "이씨 사건의 경우 조사관들의 광범위한 탐문조사 덕에 사건의 실체에 한발 다가서기는 했지만 이씨의 죽음에 공안기관이 조직적으로 연루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결정적 자료는 없는 상태"라면서 "책임자도 적극적 협조의사를 밝힌 만큼 국정원의 자료협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south@yna.co.kr

(끝)

“국정원 이내창 핵심자료 제출안해”

의문사규명위 “당시 이씨 감시한 3명 곧 소환”

국정원 “자료 모두 제공” 반박

지난 89년 전남 거문도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이내창씨(당시 27세·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의문사와 관련, 국가정보원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요청한 옛 안기부의 이씨 내사자료 등 핵심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13일 드러났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지난해 4월부터 5차례에 걸쳐 이씨 내사자료, 89년 임수경씨 방북 수사자료, 공안기관이 국내 간첩 조직으로 수사했던 전국민족미술운동연합(민미련) 사건자료 등 이씨가 연루된 사건의 자료를 요청했다.

진상규명위는 그러나 국정원이 이씨 사망 이후의 중앙대 동향, 안기부 인천 및 여수지부 인사기록카드 등 사건 본질과 동떨어진 자료만 3차례에 걸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진상규명위가 요구한 자료 중 파악된 자료는 모두 제출했다”면서 “미진한 자료에 대해서는 관계지부 등의 협조를 얻어 수집한 뒤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안기부가 민미련 산하 학생조직에서 활동했고 임씨의 방북 파트너로 거론됐던 이씨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씨가 거문도에 가게 된 이유 등을 규명하려면 민미련 기록과 내사 기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사건 당시 신영페리호에 동승해 이씨를 감시했던 3명의 신원을 확인한 데 이어 이들이 진상규명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판단,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kdaily.com

의문사규명위원 3명 복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내부 개혁을 촉구하며 지난해 12월22일 사퇴서를 제출했던 진상규명위 비상임 위원 3명이 사퇴 의사를 철회했다.

연병욱, 백승헌, 이석영 위원 등 3명은 지난 12일 오전 진상규명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퇴서 반려 조치를 받아들여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문사 공소시효 배제와 조사권 강화 등 민간조사관들의 요구사항을 의문사특별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놓고 논의했다.

●이창구기자

국정원 “최교수 의문사 규명 협조”

국가정보원은 지난 1973년 중앙정보부 조사 과정에서 숨진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 사건과 관련해 11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각종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한 고위간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진상규명위 사무실을 방문해 양승규 위원장과 김형태 상임위원을 만나 이런 뜻을 전달했다.

규명위 관계자는 “국정원측에서 최교수 사건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할

경우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이 간부에게 최 교수 사건을 비롯해 현재 조사중인 옛 중정 또는 안기부, 경찰 관련 의문사 사건의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정이나 안기부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직무상 비밀보호 규정 등을 들어 진술에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국정원측이 이 부분에서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국립한글박물관 설립계획 확정되어

다음달 7월경 창설계획 확정

"조형 명류" 18등으로 수료식" 율령동

율령동 미술학교는 12월 18일 오후 2시 율령동 미술학교 대강당에서 '조형 명류' 18등으로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수료식은 율령동 미술학교 교장인 김석환 교장이 사회를 맡고, 율령동 미술학교 교사들이 축하사를 전했다. 김 교장은 "이번 수료식을 통해 율령동 미술학교의 교육 수준이 한층 높아졌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율령동 미술학교는 12월 18일 오후 2시 율령동 미술학교 대강당에서 '조형 명류' 18등으로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수료식은 율령동 미술학교 교장인 김석환 교장이 사회를 맡고, 율령동 미술학교 교사들이 축하사를 전했다. 김 교장은 "이번 수료식을 통해 율령동 미술학교의 교육 수준이 한층 높아졌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녹화사업 관련 보도자료

80년대 운동권학생 1100명 강제징집 관계기관 총동원 '합작품'

의문사규명위 조사...권력최고층 입안 대학등 개입 이운성씨 사건 은폐...병적기록부도 조작 의혹

1980년대 초 시위 및 집회 참가 학생 등을 강제징집해 특별정훈교육 및 프락치 공작 활동을 벌인 이른바 '녹화사업' 대상자는 무려 1100여명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녹화사업은 당시 보안사, 치안본부, 검찰, 안기부, 문교부, 대학 등이 총동원돼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실도 확인됐다. 그동안 녹화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88년 국방부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강제징집 등 일부 사실을 밝힌 바 있으나, 대상자 규모와 각 기관의 구체적인 역할 등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3면

◇ 밝혀진 녹화사업 실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규명위·위원장 양승규) 고위관계자는 21일 "규명위에 접수된 이운성씨 등 5건의 군의문사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81년 11월부터 3년 동안 1100여명의 학생이 강제징집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결과, 관련부처와 공안기관 등이 긴밀한 조직적 협조 아래 '동향파악→연행→등급분류→강제입영→특별정훈교육'으로 이어지는 녹화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당시 공안기관 관련자로부터 '국무회의 또는 관계기관 대책

회의 같은 권력 최고위층에서 녹화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을 입안·조율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강제징집자 사망사건 조작·은폐=규명위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강제징집돼 의문사한 이운성씨 사건 등 녹화사업 관련 사건 및 기록이 군 당국에 의해 은폐 및 조작된 사실도 밝혀냈다. 이씨는 성군관대에 재학중인 82년 11월 학생의 날 시위에 참가했다 강제징집돼 83년 5월 전역을 8일 앞두고 의문사했다. 당시 군당국은 "월북을 시도했던 이씨가 보안사 조사를 받던 도중 자책감을 못이겨 목을 매 숨졌으며,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규명위 조사에서 당시 이씨를 심문했던 보안사 요원들은 "이씨가 월북을 기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사망 이후 사건발표 과정

에서 월북기도 혐의가 뒷뒤였다"고 진술했다고 규명위는 밝혔다. 규명위 관계자는 "당시 군의관이 작성한 김안소견서에 '목 주변에 손으로 쥘린 흔적이 있다'고 판정한 점이 가혹행위를 방증하며, 이씨 이마에 남은 상처도 사망 하루이틀 전에 생겼다는 외부 전문기관의 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병적기록부 조작 의혹=규명위 관계자는 "강제징집된 100여명의 병적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특수지원'이라는 낱인과 각 부대 전출 확인날인이 모두 사라졌고, 각 사항의 필체가 한 사람의 것으로 밝혀졌다"며 "녹화사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이를 숨기기 위해 군 당국이 강제징집 대상자들의 병적기록부를 일제히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수환 기자 ahn@hani.co.kr

군부정권의 추악한 과거

박정희·전두환 군부정권 아래 저질러진 공작정치
의 실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
의 조사 결과, 80년대 초 대학생들을 강제 징집하여
특별 정훈교육과 프락치 공작활동을 벌였던 '녹화
사업'은 권력 최고위층에서 입안했으며, 녹화사업
대상자만도 무려 110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리
고 유신독재 때의 대표적인 의문사 가운데 하나인
고 최종길 서울대 교수의 경우 당시 중앙정보부가
최 교수를 상대로 공작을 벌인 것이 드러났다.

과거 군부정권 아래 빚어진 온갖 인권유린과 공작
정치를 생각하면 이 두 사건은 말 그대로 빗산의 일
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극히 작은 한 부분에서
우리는 추악한 과거를 거듭 확인하게 된다.

학생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시위에 참가한 대학생
들을 강제로 징집한 '녹화사업'은 관련 부처와公安
기관이 총동원된 합작품이었으며, 징집된 학생 가운
데 의문의 죽음을 당한 이운성씨 등의 경우에는 관

련기록이 은폐·조작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최 교수
는 당시 중앙정보부의 공작합정에 빠진 것이 확인됐
다. 그는 중정 요원의 권유와 자신의 호기심 때문에
동베를린행 지하철을 탔으며, 그것이 간첩혐의의 결
정적 증거가 됐다고 한다.

이 두가지 경우만 보더라도 박정희·전두환 군부
정권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사악한 공작정치를 자행
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공작정치에 가
담했던 인물들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건재하고
있으며, 그들의 범죄를 파헤치고 극복하려는 작업
은 극히 미미하다. 친일파도 제대로 청산하지 못
한, 그리고 군부정권의 공작정치에 가담한 무리들
이 여전히 땡땡거리는 곳에서 어떻게 정의가 제대
로 설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나라의 정기를
바로잡고 후손들에게 정의로운 사회를 넘겨주기
위해 친일과 군부독재의 범죄는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

'녹화사업' 진상규명 요구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규명위·위원
장 양승규)의 군의문사 조사과정에서 '녹화사
업'의 실체가 상당히 드러난 가운데(한겨레) 2
1일치 1면)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공동
상임대표 오종렬)가 23일 녹화사업에 대한 진
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연대는 이날 규명위에 질의서를 보내 "개
별 의문사를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당시 녹화사업
의 사회·정치적 배경과 실체를 밝히는 조사에 전
력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질의서
에서 △당시 문교부·보안사·안기부 등 관련기관
에 대한 조사 결과 △당시 통수권자를 비롯해 정
책입안 및 책임기관에 대한 조사성과 등의 공개
를 요구했다. 안수찬 기자 ahn@hani.co.kr

기무사, 의문사조사 거부

강제 징집·녹화사업 "자료폐기... 오지말라"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 진상규명조사
를 벌이는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
위원회(위원장 양승규)의 실지조사
기무사령부가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진상규명위와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연대에 따르면 군 의문사를 조사중
인 위원회 조사관 2명이 지난달 30일 강
제징집 및 녹화사업에 관한 자료 등의

확보를 위해 기무사에 실지조사를 나갔
으나 기무사측이 거부해 무산됐다.
기무사는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위
원회에 '관련자료가 폐기됐으니 실지
조사를 오지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
낸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현행 법률상 국가기관에 대한 실지
조사는 기관장의 승인 하에서만 이뤄

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양위원장 등 위원회 관계자들이 지
난 5일 기무사령관 문두식 중장을 방
문해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자료폐
기 여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절차가
필요하다"며 기무사측의 적극적 소명
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승연대의 의문사 유가족들로 구성
된 '의문사진상규명위 활동쇄신을 위
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기무사의
진상규명위를 각 각 항의방문하고 녹화
사업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의 대책
수립과 기무사의 협조를 촉구했다.
강영수기자 nomad@kmb.co.kr

"기무사, 의문사조사 대화 녹취"

위원회측 "녹화사업 조사때" 유가족들등 항의-협조 촉구

국군기무사령부가 의문사진상규
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 조사관들
의 실지조사를 위한 방문시 조사관
들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규명위원회는 14일 "지난달 30일
의문사규명위 조사관 3명과 조사관 3명
이 지난 80년대 녹화사업과 관련해
의문사한 학생들의 관련 자료를 확
인하기 위해 방문, 조사를 거부당하
는 과정에서 기무사측이 조사관과
기무사 직원들과의 대화 내용을 녹
취했다"고 주장했다.
의문사규명위는 "당시 조사관이
이를 알고 녹음기를 뺐는 등 승강이
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의문사 유가족들과
관련 단체로 구성된 '의문사규명위
활동쇄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2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 서
울 종로구 시간동 기무사 본부를 방
문, 이번 녹취 사건에 대해 강력 항
의하고 녹화사업및 강제징집 관련
군 의문사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의문사규명위 황인성 사무국장은
"국가 공무원들이 정당한 목적으로
조사를 갔는데, 사전에 양해도 구하
지 않고 녹취를 한 것은 매우 유감
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의문사규명위 양승규 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난 5일 기무사령관을
만나 유감을 표명하고 기무사측의
적극적인 자료 협조를 부력한 것으
로 알려졌다.
한편 유가족들은 이날 의문사규
명위에도 방문, 기무사의 계속적인
비협조에 대해 녹화사업-강제징집
관련 의문사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
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충남기자
utopian21@munhwa.co.kr

기무사, 의문사규명위 조사 거부

‘녹화사업’ 관련 자료확인 방문 출입저지

국군기무사령부가 대통령 직속 의문사규명위원회의 ‘강제 징집 및 녹화사업 관련 군의문사 사건’에 대한 자료조사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원회는 14일 “지난달 30일 위원회 소속 조사관 3명이 1980년대 대학생 강제징집 및 녹화

사업과 관련한 의문사 사건의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일 양승규(梁承圭) 위원장 등 위원회 관계자들이 문두식(文杜植) 기무사령관을 방문해 “의혹을 풀기 위해서

는 자료 폐기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라도 필요하다”며 기무사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기무사는 지난달 29일 ‘요구하는 자료는 이미 폐기됐고 향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적시하면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위원회에 보냈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인혁당-민청학련’ 수사기록 찾았다

의문사규명위, 국방부 보관자료 입수

의문사진상규명위는 1974년 ‘인혁당 사건’ 및 ‘민청학련 사건’의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일부를 최근 국방부에서 입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인혁당 사건 관련 기록에 대해 유가족 및 관련단체들이 공개를 요청했지만 당

시 수사기관 등은 자료가 없거나 보존 연한이 지나 폐기했다고 주장해 왔다. 위원회측은 최근 이 기록들을 국방부가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최근 일부 기록을 전달 받았다.

위원회는 올 초 인혁당 사건으로 수감돼 감옥에서 병사한 것으로 발표된 장석구씨(당시 48세) 사건을 직권 조사중이다. 인혁당 사건은 인혁당이 북한 의 사주와 지원으로 ‘민청학련’이란 조직을 만들어 정부 전복을 기도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도예중(都禮鍾)씨 등이 검거된 뒤 다음해 4월 검거자 중 8명이 사형됐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의문사 규명 거부해선 안된다

국군기무사령부의 행태가 대단히 실망스럽다. 지난달 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가 80년대 대학생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과 관련한 의문사 사건의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기무사를 방문했으나 기무사는 이들의 출입조차 거부했다는 것이다. 기무사는 “당시 자료가 폐기됐고 향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적시하면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지만, 이는 지난 시절의 술한 군(軍) 의문사 사건에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 70, 80년대 학생운동 탄압과 정보 수집을 위해 군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집단적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은 이제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10월에는 81년 11월부터 3년간 무려 1100여명의 대학생이 강제 징집됐다는 사실이 의문사진상규명위 조사로 공개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무고한 생명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의혹도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유신 시절의 대표적인 의문사 중 하나였던 1973년 최종길(崔鍾吉) 전 서울대 법대 교수 사건이 당시 중앙정보부 요원의 타살이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그런데도 과거 대학생 강제 징집 및 녹화사업에 핵심 역할을 맡았던 기무사는 그동안 ‘담당 부서가 폐지됐고 관련자는 모두 퇴직

했다’는 등 책임회피성 변명만 거듭해 왔다. 기무사는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리려는 몸짓을 계속하고 있을 것인가. 이번에 기무사가 보여준 행태는 권력기관들이 부끄러운 과거를 밝히는 일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1999년 12월 특별법이 제정돼 2000년 10월에 출범한 대통령 소속기관이다. 특별법 1조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위원회 구성 자체가 1998년 10월부터 400여일간 계속된 의문사 유가족들의 국회 앞 천막농성으로 이뤄졌다. 어두웠던 과거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우리 시대의 소명이 돼 있는 것이다.

불행한 과거사는 뒤늦게나마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사건 당사자들이 치열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온전히 치유될 수 있다. 이번처럼 책임 있는 기관이 변명만 일삼는다면 작게는 유가족들의 한(恨)만 쌓여갈 뿐이고, 크게는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서는 날이 요원해질 뿐이다. 기무사는 의문사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것만이 역사 앞에 바로 서는 길이다.

사설

대통령 위에 있는 공안기관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지난달 말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기무사령부를 방문해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했다. 기무사쪽은 기관의 특성상 문서를 특정해서 요구하지 않으면 줄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우리는 기무사의 주장을 납득할 수가 없다. 공안기관들이 수십년 동안 쉬쉬해오던 문서를 외부 기관이 어떻게 자료의 소재와 제목 등을 정확히 알고 신청할 수 있겠는가? 기무사의 태도는 관련 문서가 설사 폐기되지 않고 남아 있더라도, 내놓지 못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규명위의 진상조사 작업에 각 부처가 협조를 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지시를 해도 무시하는 기관은 도대체 어느 나라 소속인가?

오랜 세월 의문사 사건들에 두텁게 드리워져 있던 검은 장막이 최근 조금씩 걷히고 있다. 대표적 의문사 사건의 하나인 최종길 전 서울대 교수 사건의 경우 7층에서 밀어뜨려서 숨지게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전직 간부의 진술이 나왔다. 1973년 10월에 발생한 사건의 실체에 이 정도로 접근하는데 무려 28년이 걸린 셈이니 도대체 그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는 공안기관 특유의 '조직 물신주의' 탓이 가장 크다고 본다. 특수한 업무를 다루는 특수한 기관이기 때문에 하는 일에 오류가 있을 수 없으며, 나중에 중대한 잘못이 드러나더라도 철저히 진상을 숨겨 조직을 지키려 하는 것이다.

수지 김 사건은 바로 조직 물신주의의 전형적 사례다. 5공 말기 단순 살인 사건을 간첩·납북기도 사건으로 조작했던 정보기관의 수뇌부가 계속 침묵을 지킨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의 현직 간부들이 은폐에 적극적으로 나선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6·10 민주 대항쟁을 통해 권위주의 정권이 이른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로 바뀌었는데도 공안기관들은 본질적 변화 없이 조직 물신주의에 그대로 젖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의문사규명위가 기무사에 관련문서를 제출해달라고 한 녹화사업은 5공 초기에 일어난 대표적 인권탄압 사례다. 군부정권에 저항하는 대학생들을 강제로 징집한 뒤 동료 학생들에 대한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녹화사업의 대상자는 무려 1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락치 활동을 거부하면 가혹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숨지는 사람이 생기면 월북을 기도하다 자살했다는 식으로 몰아갔다. 보안사가 녹화사업과 관련해 저지른 잘못을 기무사가 왜 감싸려 하는가?

정권이 몇 차례 바뀌어도 공안기관들이 군부독재 때의 속성과 정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공안기관들은 위에서부터 밑까지 환골탈태해야 한다.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음모, 조작, 은폐 분위기에 폭 빠져 있는 사람들을 계속 기용한다면, 정보사 직원이 청부폭력에 동원되는 한심한 사례들을 막을 수 없다.

80년대 軍 '녹화사업'

전두환씨 입김 작용

1980년대 초 강제징집된 운동권 학생들을 프락치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녹화사업'의 입안에 전두환(全斗煥)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는 19일 "지난해 말 녹화사업 희생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최경조 당시 보안사령부 대공처장이 '당시 쏠대통령의 질책을 받고 사업안을 구성하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최전처장은 위원회에서 "82년 청와대 만찬에서 대통령이 입대한 운동권 학생들에 대한 얘기를 들던 중 '년 뭐하는 거냐'라며 질책해 녹화사업을 구상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궁욱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80년대 운동권 강제징집·프락치 강요 '녹화사업' "전두환씨가 사실상 지시해"

당시 보안사간부 진술

1980년대 초반 운동권 학생들을 강제 징집해 프락치로 활용한 이른바 '녹화사업'이 사실상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다는 당시 보안사령부 관계자의 진술이 나왔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규명위)는 19일 최경조(64) 당시 보안사 대공처장이 지난해 말 규명위 조사에서 "82년 청와대에서 열린 보안사 관계자 만찬 당시 전 대통령이 입대한 운동권 학생들에 대한 얘기를 듣다가 내게 '뭐하는 거냐'는

질책을 했다"며 "이에 따라 보안사가 이들을 대상으로 정훈교육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규명위 관계자는 "보안사의 특성상 당시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명백한 지시였다'는 것이 옛 보안사 관계자들의 일치된 증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 당시 대통령의 질책이 있고 난 뒤 보안사를 중심으로 국방부·내무부·문교부·병무청 등이 총동원돼 보안사에 심사가 설치돼 82년 9월계부터 본격적으로 '녹화사업'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녹화사업에 직접 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군 관계자의 진술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규명위는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이 녹화사업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데 조사를 모으기로 했다. 지난 80년대 초반 군에 강제징집된 447명의 대학생 중 녹화사업 대상자는 265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6명이 의문사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80년대 운동권학생 강제징집 '녹화사업' “쑤전대통령 지시에 따른것”

당시 보안사간부 진술

1980년대 초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가 운동권 학생들을 강제 징집해 프락치 활동 등을 강요한 '녹화사업'의 입안은 당시 전두환(全斗煥)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관계자의 진술이 나왔다.

19일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보안사 대공처장이었던 최경조씨(64)는 지난해

12월 위원회에 나와 “82년 청와대에 서 보안사 간부들 만찬을 할 때 전 대통령이 (운동권 입대자들이 붙은 낙서를 쓰고 있다는) 군내 상황을 듣다가 ‘아, 최경조, 너 인마 뭐하는 거야’라며 혼을 내는 말을 듣고 보안사가 정화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에서 교육계획(녹화사업)을 세웠다”고 진술했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최씨는 대통령의 그 말을 지시로 받아들였다

고 진술했다”며 “하지만 지난해 12월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박준병(朴俊炳)씨를 소환 조사했을 때, 박씨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의문사 규명위 “전두환씨 조사”

“80년대 학생 녹화사업 개입” 진술따라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 집권 당시인 80년대 초반 수백명의 운동권 학생들을 강제징집해 '특별 정훈교육' 명목으로 프락치 활동을 강요했던 이른바 '녹화사업' 입안에 전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이에 따라 “최종적인 사

실 확인을 위해 전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당시 보안사령부 대공처장이던 최경조(崔景朝·64)씨가 작년 말 “82년 청와대에서 보안사 간부들이 만찬을 할 때 전 대통령이 입대한 운동권 학생들에 대한 얘기를 듣다가 ‘너 인마 뭐하는 거야’라

며 나에게 질책을 하기에, ‘보안사가 학생들을 정화시켜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녹화사업 계획을 세웠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최근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박준병(朴俊炳)씨를 조사했으나, “보안사 주도로 녹화사업이 시행된 것은 사실이나,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李恒洙기자 hangsu@chosun.com

‘녹화사업’ 전두환씨가 지시

당시 보안사 처장 “보고후 결재받아”

의문사 규명위, 조만간 쑤씨 조사키로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이 1980년대 운동권학생들에 대한 '녹화사업' 입안을 직접 지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조만간 전 전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이다.

규명위는 당시 보안사령부 대공처장(대령)이었던 최모(64)씨가 “81년 청와대 보안사 간부 만찬 때 ‘운동권 대학생들의 군 입소 후 군내에 붙은낙서가 빈발하고 있다’는 군 상황 보고를 들은 전 전 대통령이 꾸지람을 해, 보안사가 앞장서기로 하고 교육계획(녹화사업)을 세웠다”고 진술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또 “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구상은 내가 직접 했으며, 입안 후 대통령에게 보고해 결재도 받았다”며 “관련 서류를 현 기무사가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무사는 규명위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해 “윤석양(尹錫洋) 일병 보안사 정치사찰 폭로사건을 계기로 90년 당시 보안사가 문제가 될만한 자료를 모두 폐기해버려 녹화사업 관련 자료도 없어졌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박준병(朴俊炳·68)씨는 지난해 말 규명위 조사에서 “교육사업에 관해 보고를 받았으나 ‘6명이 죽었다’는 등의 구체적 사실과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대통령도 88년 5공 청문회 당시 “의문사 등을 보고 받지 못했다”고 증언하는 등 핵심관련자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있어 녹화사업에 대한 진상규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운동권 징집 프락치 강요

● 녹화사업 5공화국 초기인 81~83년 학생운동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특별정훈교육'이란 명분을 내세워 강제징집된 운동권학생들에게 가해진 정신·육체적 가혹행위. 단순한 '의식교정'뿐 아니라 육체적 고문과 함께 학원 프락치 활동까지 강요했다. 당시 강제징집된 447명 중 265명이 녹화사업 대상자였으며, 이중 6명의 의문사사건이 발생했다.

보인다.

규명위 관계자는 “당시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현 규명위 조사방법으로 녹화사업의 실체를 밝히기는 쉽지 않다”며 “국회에서 규명위 권한을 강화한 새 ‘규명위 법’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모기자 young5@hk.co.kr

“신군부 ‘녹화사업’ 집권전부터 계획”

의문사규명위, 80년대초 계엄사 자료 분석...의문사 조사권한 강화 촉구

1980년대 초 운동권 학생들을 강제 징집해 프락치 공작을 벌인 이른바 '녹화사업'은 당시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기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됐으며, 82년 9월경부터 사전 시험단계까지 거친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규명위)는 20일 "국방부 등이 88년 국회 5공특위에 제출한 자료와 계엄사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규명위 관계자는 "이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80년 1월 신군부는 계엄사령부 안에 자문위원회를 두고 정치·사회·노동·학원 등 8개 분야에 걸쳐

'정책사항' 마련에 들어갔으며, 이 가운데 학원대책과 관련해 '문제학생'에 대해 '구속·입영조치'를 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5공특위에 제출된 자료에는 '문제학생의 급격한 입대 증가로 군내 의식화 관련 불온 난동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자료에는 녹화사업의 사전 시험 단계로 당시 보안사가 82년 9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강제 징집된 학생 가운데 32명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걸쳐 특별 정훈교육을 실시했으며, 83년

1월부터 2월까지 정훈장교 23명을 선발해 '특별 정훈교육'을 맡도록 한 사실도 기록돼 있다고 규명위는 밝혔다.

규명위 관계자는 "이런 녹화사업의 실제적 진실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는 규명위의 조사권 강화와 조사기간 연장이 절실하다"며 △관련자 통화·금융거래 내역 제출권 △공소시효 배제 및 사면권 인정 △압수수색 및 강제구인권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의문사특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문덕형 규명위 제2 상임위원은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녹화사업' 신군부 집권이전 계획

강제징집 대학생 증가 '의식화 사건' 빈발 따라

1980년대초 강제징집된 운동권 학생들에 대한 특별정훈교육이란 명분으로 실시된 보안사의 '녹화사업'은 신군부가 집권 이전부터 계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문사 진상규명위는 21일 "국방부가 1988년 국회 5공특위에 제출한 자료와 계엄사 관련자료 등에 따르면 신군부는 80년 1월 계엄사령부내에 자문위원회를 두고 정치·사회·학원 등 8개 분야 정책사항을 마련했으며, 학원대책 부분에서 '문제 학생은 구속, 입영 조치하라'는 대책을 세웠다"고 밝혔다.

의문사규명위는 "이들 자료에는 '문제 학생의 급격한 입대 증가로 군내 의식화 관련 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이는 신군부가 강제징집된 학생들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녹화사업'을 계획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충남기자 onk@munhwa.co.kr

팔당인근 불법묘지 검찰 "원상복구 명령"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수사과는 21일 팔당상수원에 인접한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 야산에 불법 조성된 묘지 등으로 산림이 훼손된 2만8200㎡에 대해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검찰은 팔당주변 양명군 양서면과 수변구역인 가평·광주군에서 묘지와 전원주택을 불법 분양한 업자들도 수사를 계획이다. /의정부=오명근기자 onk@munhwa.co.kr

쫓겨 보안사에 지시뒤 결재까지

학원 녹화사업 의문사 배일 뱀나

5공화국 초기인 1981-83년 사이 집중적으로 진행된 '녹화사업'은 여전히 미완의 진실로 남아있다. 당시 신군부는 학원안정화 방안으로 운동권 학생들을 강제 징집했고, 가혹행위 등을 포함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단순한 '의식교육' 뿐 아니라 육체적 고문과 함께 프락치 활동을 강요했으며, 이 과정에서 6명의 의문사 사건이 발생했다. 녹화사업 진실 찾기는 1988년 5공 청문회를 시발로 현재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작업에 이르고 있다.

◆전두환씨 녹화사업 지시=녹화사업은 보안사령부가 주도했다. 그러나 전두환씨가 녹화사업안을 직접 지시하고 진행상황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이나 증언, 관련 기록은 확보되지 못했다. 상식을 뒷받침할

입증자료가 없었던 것이다. 녹화사업 입안 당시였던 전 보안사 대공처장 최경조씨의 의문사규명위에서의 진술은 전씨가 녹화사업을 보

안사에 지시한 사실을 명확히 보여 준다. 또 전씨가 녹화사업안을 보안사령관을 거쳐 결재한 사실도 밝혀고 있다.

그렇지만 최씨는 녹화사업 도중 운동권 학생들이 의문사한 부분 등 추가 상황도 전씨가 보고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전씨는 5공 청문회에서 "의문사들을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사실상 녹화사업에 간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문사규명위는 전씨에 대한 조사를 추진, 녹화사업의 전모를 규명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강제징집·녹화사업의 진실=녹화사업 피해자들은 '프락치 강요로 정기적으로 대학 선·후배들의 동향을 파악해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엄청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최경조씨도 '학내의 서클이나 조직이 간첩과

연계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고려하고 대공정보 수집을 위해 그러한 임무를 보안사 요원들이 주었을 수도 있다'고 프락치 강요 가능성을 인정했다. 내무부, 문교부, 국방부 등이 조직적으로 강제징집에 간여했다는 문건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의문사규명위 조사권 강화 필요=기무사 등은 현재 의문사규명위에 '관련 자료 폐기' 등을 이유로 자료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수사관계자들도 부인하고 일관하고 있다. 결국 전두환씨 등에 대한 포괄적 조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의문사규명위의 조사권 강화가 시급하다. 의문사 관계자는 '의문사 특별법 개정안이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 등에 관계했던 일부 의문들의 방해를 줄수 처리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충남기자 utopian21@munhwa.co.kr

신군부 '학원 길들이기' 강제징집 대공정보 수집 명분 프락치 강요 내무-문교-국방부 조직적 간여

녹화사업 진상 밝혀야

1980년대 초 보안사가 운동권 학생들을 군에 강제징집해 특별정훈교육 명목으로 프락치 활동을 강요했던 이른바 '녹화사업'이 사실상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는 당시 보안사 대공처장이던 최경조(64)씨가 지난해 말 진상위 조사에서 '82년 청와대에서 보안사 간부들이 만찬을 하던 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운동권 입대자들의 불온한 낙서 등에 대한 강한 질책을 받고 녹화사업 계획을 수립했음'을 진술했다고 19일 밝혔다.

80년대 초 당시 군에 강제징집된 대학생은 447명으로 이 가운데 265명이 녹화사업 대상자로 분류됐으며 그중 6명이 의문 속에 사망했다. 진상규명위는 의문사 유족들의 신고를 받아 의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관련 기관들이 '관련 자료가 이미 파기됐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진상규

명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녹화사업 전모와 의문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은 1988년 국회 '5공청문회'에서도 시도됐으나 당시 전씨는 녹화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번 최씨의 진술로 전씨가 녹화사업을 지시했음이 처음 드러난 것이다.

군사정권에 의해 강제징집돼 젊은 목숨을 잃은 의문사 당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녹화사업 대상 학생들이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해 선후배들의 동향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엄청난 것이었다. 전씨가 집권과정에서 범한 잘못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녹화사업과 관련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유족과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고, 그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기무사 등 관련 기관도 마찬가지로 협조해야 한다. 다시는 그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녹화사업 몸통, 처벌길 열어야

우리 사회에는 힘있고 배경 좋은 집안 출신이라면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통념이 널리 퍼져 있다. 그래서 군대에 간 사람들은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한다고 하면서도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곤 했다. 5공 초기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군대에 강제로 끌려갔다가 의문의 주검으로 발견된 젊은이들이 겪은 비극은 일반 군대생활의 어려움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체제에 비판적인 젊은이를 입영시켜 특별 정훈교 훈이란 명목으로 취조·고문을 한 녹화사업의 몸통이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의 노력으로 드러나고 있다. 12·12 반란으로 실권을 쥔 신군부는 1980년 1월 계엄사령부에 자문위원회를 두고 정치·사회·노동·학원 등 8개 분야의 정책사항을 입안했으며, 학원대책으로 '문제학생'을 '구속·입영조치'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82년 9월 본격화된 녹화사업은 각 분야의 '불안 요소'들을 초법적 수단으로 제거 '사회정화'를 이룬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녹화사업의 가증스런 실상은 원통한 죽음을 당한 젊은이에게 율복 기도가 드러나자 자살했다고 발표했던 데서 분명히 나타난다. 당시 보안사, 안기부, 검찰 등 국가 권력기관이 총동원된 인권말살 작업의 진상이 이제야 밝혀진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는 것을 뜻한다. 규명위는 어려운 제약 조건 아래서도 전두환씨가 당시 보안사 간부들을 질책해 녹화사업을 지시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우리는 규명위의 이런 성과가 전씨 등 당시 핵심 관계자의 책임을 묻는 단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믿는다. '수지 김 간첩조작 사건' 처럼 안기부 책임자였던 장세동씨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활보하는 사태를 막으려면 규명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인도에 관한 범죄에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원로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명목으로 청와대에 군부반란 책임자를 초정하는 한심한 관행도 중단돼야 한다.

베일 벗겨지는 '녹화사업'

군 복무 중 보안부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다가 사망한 성균관대 학생 이윤성씨 의문사 사건이 타살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이 사건 수사관들과 보안부대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불온전단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혐의사실은 조작이라는 진술을 받아들였다.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이씨가 율복을 기도한 사실도, 불온전단을 소지한 사실도 없었으며, 부대 안 정구장 심판대에 목을 매 자살했다는 군 당국의 발표도 조작됐을 개연성을 말해주는 결정적인 단서로 볼 수 있다. 이씨를 연행한 이유가 불온전단 소지나 율복기도 혐의가 아니라, 녹화사업 때문이었다는 진술은 간과할 수 없는 의미를 지닌다. 녹화사업이란 반정부 데모 학생들을 강제로 입대

시켜 생각을 바꾸게 하거나, 이 들을 학원정보 수집요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말하는 군사정권 시대 공안동치 수법이었다. 이씨를 학원프락치로 활용하려는 회유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은 그 사업의 비인간성과 폭력성을 고발하는 증언이기도 하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된 많은 군 관련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타살 가능성이 드러났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의 의미는 크다. 이들의 사망소식을 접한 유가족은 뺨맞이로 몰아대는 당국의 서술이 무서워 꼭 소리도 내지 못했다 한다. 어머니는 울화병 때문에 오랫동안 정신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이제 단서를 찾았으니 진상규명위는 조사를 서둘러 책임하계를 분명히 가려내고, 엄하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유가족을 위로해주시 바란다.

신군부 '녹화사업' 국가기관 총동원

의문사족, 전모 담은 '보안사 문건' 첫 공개

시위대학생 447명 징집... 265명 정훈교육

최전방 배치... 전담장교 통해 '프락치' 지휘

1980년대 초 집회 및 시위 관련 대학생들을 강제징집했던 이른바 '녹화사업'의 전모를 담은 당시 국군보안사령부의 공식문서가 최초로 공개됐다. 녹화사업이 당시 징집관련자와 피해자들의 증언 등을 통해 알려졌으나 공식문건으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이 문서는 보안사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던 녹화사업이 보안사 외에 치안본부, 검찰, 내무부, 문교부 등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총동원된 초법적인 인권유린 행위였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8일 보안사가 1988년 국회 5공비리 특위에 제출한 '학번자(특수학적 변동자) 특별정훈교육 관련 진상(소위 녹화사업)' 문서를 14년만에 공개하고 "보안사가 1981년 11월부터 1983년 11월까지 집회 및 시위 관련 대학생 447명을 강제징집했으며 이중 265명이 특별정훈교육이란 이름으로 녹화사업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제징집을 위해 내무부는 입영대상자를 문교부에 통보하는 업무를 맡았고, 문교부는 통보받은 인원내 대한 특수학적 변동조치를 담당했다. 또한 병무청은 문교부 명단 중심으로 입영대상자 지원서를 접수했고, 국방부는 병무청 보고로 육·해군본부에 입영부대 및 일시를 지시했다. 보안사는 강제징집에서부터 대상자가 부대에 배치된 뒤 동태 파악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했다. ◇녹화사업=녹화사업은 강제징집된 대학생 447명중 265명에게 특별정훈교육이란 이름으로 1982년 9월부터 1984년 11월까지 실시됐다. 보안사는 이를 위해 1982년 9월6일 녹화사업 업무전담과까지 신설했으며 이 해 9월부터 4개월간 대학생 32명을 대상으로 1주일씩 녹화사업 시험교육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1983년 1월과 9월 2차례 녹화사업 전담 정훈장교 23명을 선발했으며

이들은 강제징집 대학생들이 배치된 전방 9개 사단과 4개 군단 지원보안부대에 1명씩 배치됐다. 보안사는 녹화사업 전담 정훈장교의 선발기준으로 대학출신 학사장교, 사회과학 전공, 교내 동아리 활동의 경력이 있거나 신(新)좌경이론에 밝을 것 등을 제시했다. 녹화사업 대상자들은 보안사 모 본실이나 지역 보안부대에서 정훈장교와의 1대 1 대화 등을 통해 1주일간 순화교육을 받았으며 교육 이후에는 해당부대의 보안요원들이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관리했다. 보안사는 이 문서에서 정훈교육 대상자들은 원대복귀 전 2~3일간 휴가를 보내거나 필요시 정가휴가, 의출, 외박을 통해 학내사정을 제보토록 하는 등 녹화사업을 통한 프락치 공작을 총지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녹화사업 관련 군 의문사 6건과 관련해 "1988년 국회에 제출된 자료조차 위원회 출범 이후 1년 여가 지나서 일부만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관계기관이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이라며 "아직도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녹화사업의 인권침해 실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수 이화춘기자 arisu@kmib.co.kr



1980년대 초 반정부 집회 및 시위 대학생들을 강제징집했던 '녹화사업'의 전모를 담은 당시 국군보안사령부의 문건. 징집 대학생들을 최전방 특수지로 격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의문사위 '녹화사업' 소환조사 현역의원 3명 불응

당시 검·경출신... 운동권 학생 강제징집 실무

"입법 당사자들이 정작 법 외면" 비난 일어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1980년대 초 운동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군 강제징집 과정에서 당시 실무를 맡았던 검찰과 경찰 출신 현직 국회의원 3명에게 소환조사를 요구했으나 이들이 모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원들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 1999년 12월 국회에서 표결없이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할 의원들이 오히려 이를 외면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강제징집은 당시 내무부 보안사 치안본부 검찰 문교부 등 국가기관들의 초법적인 합작품이었다는 사실(본보 2월28일자 31면 보도)이 이미 드러난 상황이다.

4일 의문사진상규명위에 따르면 1981년 강제징집돼 이듬해 7월 철책 근무 도중 숨진 연세대생 정성희씨(당시 20세) 의문사 사건 조사과정에서 당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였던 정형근 의

원과 최연희 의원(이상 한나라당)이 시위 관련 대학생들에 대해 강제징집 및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9일 두 의원과 1981년 치안본부장을 지낸 유흥수 의원(한나라당) 등 3명에게 "정씨 등 강제징집 관련 의문사한 6명에 대한 조사를 위해 12월24일에서 2002년 1월5일까지 위원회에 출두해 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세 의원은 모두 거부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유의원측은 의정활동 때문에 출석이 곤란하다는 내용의 팩스를 보내왔으며, 정의원측은 조사내용 등을 전화로 물어본 뒤 소환에 불응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서면조사에만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이들 의원 3명의 조사를 통해 당시 정씨가 징집대상 연령이 아닌데도 강제징집되는 등 초법적으로 진행된 강제징집의 근거, 강제징집과정에서 당시 검경의 역할, 강제징집의 실태와 전모를 파악할 계획이었다. 법

무부도 의문사진상규명위로부터 1981년 서울지검 공안부 직제표와 정·최의원 등 공안부 검사에 대한 인사기록 등을 요구받았으나 현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의원측은 "당시 공안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받을 이유가 없고 위원회에서 강제징집과의 구체적인 관련성에 대해 통보해 주지 않았다"고 불응이유를 밝혔다. 유의원측은 "의사일정이 바빴으며 강제 징집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어 해줄 얘기가 없다"고 해명했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이은경 사무처장은 "법을 가장 철저히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할 의원과 법무부가 이처럼 의문사 진상규명에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도덕적 비난뿐만 아니라 당시 가해기관을 비호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씨는 1981년 11월25일 연세대 교내시위 도중 경찰에 연행돼 강제징집된 뒤 이듬해 7월23일 새벽 전방모 사단에서 철책근무 도중 숨졌으며, 당시 군은 "정씨가 군 생활을 비판해 M16 소총을 목에 대고 4발을 발사해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강영수기자 nomad@kmib.co.kr

'녹화사업' 조사 의원3명 불응

정형근의원등 검·경찰출신

의문사위, 3개월전 소환통보

'녹화사업' 의문사 관련 조사대상인 현직 의원 3명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소환 요구에 잠기간 불응, 규명위원회의 조사권한 한계가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는

4일 '녹화사업'에 동원돼 1982년 전방 철책근무 도중 권총자살한 것으로 보고됐던 연세대생 정성희씨(당시 20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검찰과 경찰 출신 현직의원 3명에 대해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3개월 이상 불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였던 정형근(鄭亨根) 의원과 최연희(崔

鉛熙) 의원(이상 한나라당)이 당시 시위 관련 대학생들의 강제징집과 구속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 지난해 12월 중순 위원회에 1월5일까지 출두해 달라는 요구서를 보냈으나 거부당했다.

81년 치안본부장을 지낸 유흥수(柳興洙) 의원(한나라당)도 출석요구를 거부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정형근 의원 등 3명 의문사위 소환 불응

80년대 녹화사업 관련조사 협조 거부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1980년대 초 운동권 학생들을 강제징집해 특별정훈교육 및 프락치 공작을 벌인 이른바 '녹화사업'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 간부 출신 현직 국회의원 3명에게 출두를 요구했으나 모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규명위 관계자는 4일 "80년대 초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였던 정형근·최연희 의원과 치안본부장을 지냈던 유흥수 의원 등 한나라당 국회의원 3명

에게 1월5일까지 출두해 달라고 지난해 12월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규명위측은 81년 강제 징집돼 이듬해 7월 철책근무 도중 숨진 연세대생 정성희(당시 20살)씨 의문사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정씨를 담당했던 경찰관으로부터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였던 정형근·최연희 의원이 시위참가 학생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를 담당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정 의원 등에게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측은 "지난 연말 통보가 왔으나 바빠서 못갔으며 이후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면서 "당시 공안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석해야 하는 것인지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 의원은 의정활동 때문에 출석이 곤란하다고 밝혔고, 최 의원은 서면조사를 요청해왔다고 규명위측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규명위는 법무부에 80년대 초 서울지검 공안부 직제표와 검찰 출신 두 의원의 인사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적시해 달라"며 거부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가족단체 관계자는 "1999년 1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의문사특별법을 통과시켰는데도 의원들이 규명위의 조사활동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응봉 방영위임은 '조사' '입사' '공'

의문사위 '녹화사업' 조사 국회의원 3명 소환 불응

1980년대 초 운동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군 강제징집 과정에서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현직 국회의원 3명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4일 "82년 강제 징집돼 군복무 중 숨진 정성희(당시 20세)씨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치안본부장이었던 유흥수 의원과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였던 정형근·최연희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규명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정씨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 등으로부터 '이들 의원 3명이 당시 시위 관련자에 대한 강제징집에 결정권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2002년 1월 5일까지 출두해 달라'는 요구서를 보냈지만 모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궁욱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鄭亨根-崔鉛熙-柳興洙의원 녹화사업 진상조사 응하라" 與, 의문사위 진술촉구

민주당 윤호중(尹昊重) 부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최연희(崔鉛熙) 유흥수(柳興洙) 의원은 녹화사업 차원에서 학생운동 관련자의 강제징집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당시 수사경찰관들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술과 관련해 위원회의 진상 조사에 떳떳이 응하라"고 촉구했다.

윤 부대변인은 "녹화사업으로 징집됐다든 의문사한 6건에 대한 조사에서 당시 수사 경찰관들은 '유흥수 당시 치안본부장은 학생들의 신병확보를 책임졌고, 정형근 최연희 의원은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로서 경찰 수사를 지휘했다'고 진술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형근 의원은 "공안담당 검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법적 연계성 없이 의문사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응대할 가치가 없다. 검사로서 법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뿐이며 의문사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인혁당' 사건 관련 보도자료

의문사추, 국방부서 재판기록 26년만에 입수 '인혁당' 진실규명 길 열려

사법사상 최악의 판결로 꼽히는 1974년 '인혁당 (인민혁명당)사건'의 재판관련 기록이 발견돼 이 사건 진실규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김형태 상임위원은 14일 "그동안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관련기구에서 정부에 인혁당 사건 수사자료 공개를 요청했지만 '없다'는 회신만 받았다"며 "위원회가 인혁당 사건으로 옥중사망한 장석구씨(당시 48세)의 직권조사 과정에서 국방부에서 자료를 발견해 최근 사본을 넘겨받았다"고 말했다.

위원회가 찾은 자료는 '군법회의 소송기록'이라는 민청학련 및 인혁당 사건 수사와 공판 기록으로 '재판장소 비상고등군법회의, 보존연한 30년' 등의 표시가 돼 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관계자는 "보존연한이 30년으로 돼 있지만 영구 보존문서"라며 "그동안 당국이 자료가 있음에도 고의로 숨겨온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자료를 검토, 장석구씨의 옥중사망과 관련한 진실을 규명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인혁당 사건의 본질이 당시 중앙정보

부에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면 상당한 과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사건과 관련, 대법원에서도 혐의 사실이 인정돼 8명이 사형 집행됐기 때문이다. 법정 판결로 사형이 집행된 사안이 재규명될 경우 증정은 물론 사법부까지 역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혁당 사건이란 중앙정보부가 74년 유신반대투쟁을 벌인 민청학련을 수사하면서 배후세력으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 이들을 북한의 지령을 받은 지하조직으로 규정해 5월27일 내란예비음모 및 내란 선동혐의로 23명이 구속돼 10개월 만인 75년 4월8일 주요 관련자인 서도원·도예종·이수병 등 8명이 사형 판결을 받았다. 국제법학자협회는 인혁당 사건 관련자 8명의 사형이 집행된 75년 4월9일을 '사법 암흑의 날'로 규정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와 유족들은 그동안 인혁당 사건이 중정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해 왔으며, 일부 관련자들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민주화운동 관련여부 심사를 요청하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접수했다.

원회복기자 wonhb@kyunghya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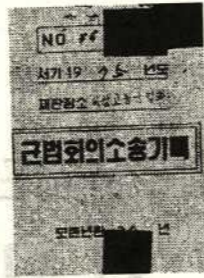
‘인민혁명당’ 수사·공판기록 첫 공개

의문사조, 국방부서 입수

박정희(朴正熙) 정권 시절 최악의 ‘사법살인’으로 불리는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관련 수사·공판기록의 존재가 최초로 확인됐다.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지난주 국방부로부터 사과박스 2개 분량의 인혁당사건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넘겨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가 74년 유신반대 투쟁을 벌였던 민청학련을 수사하면서 배후·조종세력으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 이를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한 내 지하조직이라고 규정한 사건. 이듬해인 75년 4월 9일 서도원



며, 무기징역 7명, 징역 20년 4명, 징역 15년 4명 등 관계자 전원이 징역 15년에서 사형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증거가 미흡하고 관련자들이 심한 고문을 받았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박정희 정권의 용공조작이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朴英哲기자 ycpark@chosun.com

(당시 52세·전 M신문 기자), 도예종(51세·S토건 회장)씨 등 인혁당 사건 피고인 중 8명은 사형이 집행됐으

‘인혁당’ 공판기록 첫 공개

“자료 폐기” 국방부 주장 거짓 드러나

30여년 가까이 베일에 가려져 있던 민청학련과 ‘인혁당’ 사건 관련 수사·공판기록이 최초로 공개됐다. 이에 따라 ‘자료 보존연한이 지나 폐기했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는 14일 ‘인혁당’ 관련 사망자 사건을 조사하면서 1974년 유신반대 투쟁과정에서 발생한 민청학련 및 ‘인혁당’ 사건의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이 국방부에 보관돼 있음을 확인, 최근 그 중 일부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74년 유신반대 투쟁을 벌였던 민청학련을 수사하면서 배후·조종세력으로 ‘인혁당재건위’를 지목, 이를 북한의 지

령을 받은 남한내 지하조직이라고 규정한 사건이다. 이듬해 4월 도예종, 하재완씨 등 인혁당 사건 피고인 중 8명은 대법원에서 사형판결이 확정된지 20시간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러나 관련자 혐의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데다 조사과정 중 고문사실까지 밝혀져 민주화운동 탄압을 위한 유신정권의 용공조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진상규명위가 입수한 당시 공판기록 중에는 결장에 ‘No. 36-3, 민청사건(3)’이라는 사건번호 아래에 ‘서기 1975년도, 재판장소: 비상군사고등법원’과 ‘군법회의 소송기록’이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인혁당·민청학련 기록 찾았다

의문사규명위, 국방부서 재판기록등 입수 분석작업 강제징집·녹화사업 자료도 요청...기무사 거부

1970년대 중반 유신 반대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의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일부가 처음 공개돼 사건의 진실 규명 작업이 활기를 띠게 됐다.

인혁당 사건을 조사해온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14일 “최근 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의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일부를 국방부로부터 입수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자료를 검토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방부는 인혁당 사건 재판 기록 등 관련 자료에 대해 “보관연한이 지나 폐기했다”고 주장해왔다.

진상규명위가 입수한 당시 재판기록 일부에는 ‘No. 36-3, 민청사건(3)’이라는 사건번호 아래 ‘서기 1975년도, 재판장소:비상군사고등법원’ ‘군법회의소송기록’ ‘보존 연한 30년’이라는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이번 자료 입수로 국방부가 그동안 거짓말을 해왔음이 드러났다”며 “이 자료를

토대로 당시 수사과정에서 고문에 따른 강제징집이나 사실과 다른 진술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이날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의 진상조사를 위해 조사관 2명이 지난 30일 국군기무사령부를 방문해 관련자료 확보를 시도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양승규 위원장이 직접 기무사령관을 면담해 협조를 요청했으나 성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녹화사업 과정의 군 의문사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자료에 대한 확인절차가 꼭 필요하다”며 기무사의 협조를 촉구했다.

조성근 기자 csk@hani.co.kr

‘인혁당-민청학련’ 수사기록 찾았다

의문사규명위, 국방부 보관자료 입수

의문사진상규명위는 1974년 ‘인혁당 사건’ 및 ‘민청학련 사건’의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일부를 최근 국방부에서 입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인혁당 사건 관련 기록에 대해 유가족 및 관련단체들이 공개를 요청했지만 당

시 수사기관 등은 자료가 없거나 보존 연한이 지나 폐기했다고 주장해 왔다.

위원회측은 최근 이 기록들을 국방부가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최근 일부 기록을 전달 받았다.

위원회는 올 초 인혁당 사건으로 수감돼 감옥에서 병사한 것으로 발표된 장석구씨(당시 48세) 사건을 직권 조사중이다.

인혁당 사건은 인혁당이 북한의 사주와 지원으로 ‘민청학련’이란 조직을 만들어 정부 전복을 기도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도예종(都禮鍾)씨 등이 검거된 뒤 다음해 4월 검거자 중 8명이 사형됐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인혁당' 수사기록 첫 공개

의문사조, 국방부서 입수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는 14일 "30년 가까이 공개되지 않았던 74년 '인혁당 사건'의 수사 및 공판 기록의 일부를 최근 국방부에서 입수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육중 병사한 것으로 올해 초 발표된 인혁당 사건 관련자 장석구씨(당시 48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국방부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 최근 'No. 36-3, 민청사건(3)'이라는 제목의 공판 기록 등을 넘겨 받았다.

진상위 관계자는 "기록을 꼼꼼히 검

토하면 30년간 베일에 가려져 있던 사건의 실제와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공안당국은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의 배후세력은 북한외 지령을 받는 지하조직인 인혁당 재건위'라고 발표했으며 이듬해 도예종씨 등 8명이 사형당했다. 인혁당 대책위 관계자는 "유족들이 국방부에 수차례 공판기록 공개를 요청했을 때에는 '자료 보존 연한이 지나 폐기했다'고 말했다"면서 "입수 자료의 결과에 '보존 연한 30년'이라고 적혀 있는 만큼 당국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표기자 tomcat@kdaily.com

장준화 사건 관련 보도

"인혁당 사건은 완전 날조됐다"

국방부 공판기록 없더니 의문사규명위엔 넘겨 정부불신 키워

시/민/조/대/서

인혁당 대책위 공동대표 문정현 신부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4일 '74년 인혁당 사건'의 수사 및 공판 기록의 일부를 국방부로부터 입수했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인혁당 대책위

공동대표 문정현 신부는 "유족들이 국방부에 수 차례 공판기록 공개를 요청했을 때는 자료 보존 연한이 지나서 폐기했다고 하더니,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입수한 자료의 결과에 '보존 연한 30년'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사실을 듣고 정부당국에 대한 불신감이 더욱 높아졌다"며 분노를 표명했다.

인혁당 사건으로 도예종씨 등 8명이 긴급조치 1·4호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지 하루만에 사형이 집행된 날인 1979년 4월 9일, 국제법학자협의회가 '사법사상 압록의 날'로 명명한 바로 그 날을 문 대표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75년 4월 8일 오전 10시, 소위 '인혁당'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이 있던 날이었지요. 법원은

철저히 통제되어 있는 분위기가었는데, 영네스티 인터넷서널과 영국 배비시 방송에서만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하러 왔지요. 대법원 판결이 법정에서 나온 후에야 법정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당시 기록들은 오열하고 있었고 저를 비롯한 관중들과 가족들은 '게

전도 밝히고 명예회복·보상 이뤄져야

러 나가듯' 끌려 나갔지요." 문 신부의 다리가 불편한 것도 이때 떨어진 일이다. 서대문 구치소에서 형이 집행되었고, 사신을 실은 운구차를 두고, 경찰과 유족들간에 싸움이 일어났다. 또 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으로 대증연설을 하다 문 신부는 크레인 밑으로 떨어졌다. 원

목 무릎의 연골이 다친 후 3번의 수술을 했지만 여전히 문 신부의 다리는 불편하다.

"그때 인혁당 유가족들은 저를 '인혁당 당수'라고 불렀지요. 사실 인혁당은 조직된 사건인데, 제가 나서서 함께 진도를 밝히려려고 하니 고마웠던 게지요. 그때의 계기가 지금까지 대책위 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민청학련 운동 계승사업회'와 인혁당 대책위가 공동으로 지난 7

"지난 해에 인혁당 관련 기록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어요. 김 대통령은 75년 4월 8일 인혁당 관련자들이 사형인도를 받은 이후, 정의구현사제단이 명동성당에서 시국 기도회를 할 때도 참석했었죠. 김 대통령은 인혁당 유가족에게 '내가 재임중에 인혁당 관련 사건을 꼭 해결하겠습니다'라는 약속까지 했다고 합니다."

문 신부는 역사의 흐름이 거꾸로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희 기념관 건립 사업비를 정부예산에서 지원하는 상황과 한반도 땅에 미군이 주둔하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한미협정협정이 존속하는 현실에서 민주화와 통일과 과정은 인혁당의 진상이 규명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힘을 주어 말한다. 아울러 문 신부는 의문사진상규명위의 활동에 대해 조금이나마, 책임감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순근 기자 newscor@ngms.com)

장준하씨도 타살 잠정결론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이하 규명위)의 조사활동 시한이 두달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의문의 죽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규명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지난 1973년 이른바 '유령거점 간첩단' 사건 조사과정에서 숨진 '의문사 1호' 최종길 전 서울대 법대 교수의 죽음이 사실상 타살이란 결론에 도달하면서, 규명위가 진상 규명에 나선 나머지 의문사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교수 사건과 함께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은 지난 75년 경기도 포천군 약사봉을 등산하다 변사체로 발견된 재야운동가 고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다. 규명위는 이 사건도 이미 상당부분 결론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현장인 약사봉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해 온 규명위는 지난주에도 현장조사를 벌여 사건 당시 중앙정보부쪽이 '하산길에 실족사했다'고 발표했던 곳이 일반인은 접

■ 의문사규명위 활동시한 두달 앞으로 중앙대 이내창씨 사건등도 진전 '녹화사업' 관련 6건은 제자리

근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제차 확인하고, 타살쪽으로 잠정결론을 내린 상태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당시 중정의 발표가 허위로 드러났지만, 타살의 주체를 밝혀내는 문제는 여전히 벽에 부딪쳐 있는 상태"라며 "사건 당시 장 선생과 동행했던 인물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위원회 차원의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규명위는 또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하던 중 지난 89년 8월 전남 거문도 해안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던 이내창(당시 27살)씨 사건, 노동계의 대표적 의문사 사건인 91년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정수(당시

34살)씨의 사건 등에 대해서도 실제적 진실에 상당부분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규명위는 또 이른바 '녹화사업' 관련 진정 건에 대한 조사와 함께 당시 녹화사업 입안·운영 등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70~80년대 국가기관과 공안당국이 운영한 프락치 공작 전모를 밝히는 작업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현재 진상규명위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83건으로, 이 중 14건이 종결 처리 됐다. 특히 지난 84년 청송교도소 수감중 박영두씨가 고문과 구타로 사망한 사실을 밝혀냈고, 80년 부산 보안사 사무실에서 '김대중 내

람음모사건'으로 조사받던 중 의문사한 임기운(당시 58살) 목사도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망한 경우로 인정됐다. 나머지 12건은 취하되거나 기각됐다.

그러나 과거 운동권 학생들의 프락치 활용 의혹을 받고 있는 소위 '녹화사업' 의문사 6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지난달 관련 유가족들이 법 개정과 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등을 요구한 데서 볼 수 있듯이 유가족들과 진상규명위가 입장차이로 갈등을 빚으며 특별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진상규명위 고위 관계자는 "과거 정권이 국가기관을 동원해 학생·노동운동 진영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작 시스템을 밝혀내는 것이 개별 의문사의 실체를 밝혀내는 일만큼 중요하다"며 "남은 기간 동안 역을하게 숨진 이들의 사망 원인은 물론 그들을 숨지게 만들었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조사도 광범위하게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장준하 선생 의문사 中情서 개입 가능성

당시 현장 출동 경관 “기관원 3명 만나”

1975년 등반 도중 의문의 추락사를 당한 재야지도자 장준하 선생 사망사건에 중앙정보부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해주는 진술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서 나왔다.

5일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이모씨(56·전남 모 파출소 소장)가 “변사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갔다가 파출소로 내려가는 도중 계곡에서 나타난 건장한 남자 3명이 ‘본 것 외에는 다른말 절대 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이들이 누군지는 확실치 않았

으나 기관원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또 “사건발생 한달 뒤 현장에서 백기완씨 등 재야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추모회에 동향과약을 위해 녹음기를 가져가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르다가 백씨에게 발견돼 녹음기를 뺏겼다”고 진술했다.

진상규명위는 이씨의 진술에 따라 장선생의 의문사에 당시 중앙정보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부분에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53년 사상계를 창간하고 박정

희 정권 시절 반독재 투쟁을 벌이다 수차례 옥고를 치른 장선생은 75년 경기 포천군 약사봉 등반 도중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이호승기자

jbravo@kyunghyang.com

“장준하선생 의문사 中情 개입가능성”

당시 경찰관 “낯선 남자 3명이 합구 지시”

1975년 경기 포천군 약사봉에서 등반하다 실족사한 것으로 발표된 재야운동가 장준하(張俊河) 선생의 의문사 사건에 당시 중앙정보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의문사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사건 당시 현장에 처음 출동했던 경찰관 이모씨(56·전남경찰청 모 파출소장)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사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파출소로 내려가는 도중 계곡에서 나타난 낯선 남자 3명으로부터 ‘본 것 이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받았다는 것.

규명위는 사고 현장에서 이씨가 만난 3명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들이 중앙정보부 직원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최종길교수 사망 차대통령에 보고”

이후락씨 진술

1973년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다 숨진 최종길(崔鍾吉) 서울대법대 교수의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 당시 중정부장이던 이후락(李厚洛)씨가 최 교수 사건에 대해 보고 받고 이를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이씨에 대한 방문 조사에서 드러났다.

진상규명위는 지난주 조사관 2명

을 경기 하남시의 이씨 자택에 보내 방문조사를 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씨는 “최 교수 사망 직후 조모 당시 중정 차장보로부터 사건 전말을 보고받았다”고 진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이를 박 대통령에게 곧바로 보고했으며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도대체 사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질책했다는 것.

그러나 이씨는 최 교수의 타살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미기자 kimsunmi@donga.com

“장준하선생 의문사 현장에 기관원 3명 있었다”

현장 첫출동 경관 증언
“말하지말라 협박받고
추모제엔 도청당해”
의문사추, 中情개입 조사



1975년 경기 포천군 약사봉을 등반하던 중 실족사한 것으로 발표됐던 재야 지도자 장준하(張俊河·사진) 선생 의문사와 관련,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처음 출동했던 경찰이 기관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도청까지 당한 사실이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5일 밝혀졌다.

이에 따라 규명위는 장준하 선생 의문사에 당시 중앙정보부가 깊이 개입하고 사건 현장을 조작했는지에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규명위 관계자는 5일 “당시 담당 경찰이었던 이모(56·현 전남 모 파출소 소장)씨를 3차례 소환 조사한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협박했던 사람들과 녹음기를 부착했던 사람들이 당시 중앙정보부 직원이었을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장준하 선생 의문사 규명에 중요한 인물로 알려져 온 이씨는 그동안 소재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다가 이번 규명위에 의해 처음으로 진술이 이뤄졌다.

이씨는 이날 본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처음에는 단순한 변사 사건으로 알고 현장에 갔다가 따로 출동한 군 위생병 3명과 함께 변사자가 장준하 선생임을 확인했다”며 “조사를 위해 관비로 파출소로 내려가는 도중 계곡에서 나타난 건장한 남자 3명이 ‘본 것 외에 다른 말은 절대 하지 말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추모제 때 함께 자리했던 백기완(白基玩·통일문제연구원 소장)씨가 내 몸에 녹음기가 있다고 하길래 놀라서 떼어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당시 추모제에 중정 직원들이 많이 나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규명위는 사건이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발생 3~4시간 후에 현

장에서 이씨를 협박하고 이씨를 감시하기 위해 녹음기를 부착한 행위 등이 정보기관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중정의 직·간접 개입 여부를 확인 중이다.

한편 규명위 상임위원인 김형태(金亨泰) 변호사는 “90년대 초 원로 법의학자가 장준하 선생 시신의 외상은 표족한 상처로 맞은 듯한 왼쪽 귀밑 상처 뿐으로 실족사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규명위는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에 당시 내사자료와 포천 지역을 담당했던 직원 명단을 요구했다.

1953년 사상계를 창간, 편집장을 지낸 장준하 선생은 5·16후 박정희(朴正熙) 정권에 대해 반독재투쟁을 벌였다 수 차례 옥고를 치렀다.

/이진희기자river@hk.co.kr

“최종길교수 사망직후 朴前대통령에 보고”

이후락씨 밝혀

1973년 고 최종길(崔鍾吉) 서울법대 교수가 중앙정보부에서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다 숨진 직후, 당시 이후락(李厚洛) 중정부장이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에게 사건내용을 직접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는 지난 주 조사한 2명을 경기 하남시 이씨 자택으로 보내 이 같은 진술을 받아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그러나 최 교수의 타살의혹 부분에 대해선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희기자



장준하 의문사 중정개입 의혹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 지난 75년 경기도 포천군 약사봉에서 의문의 실족사를 당한 재야운동가 장준하 선생 사건에 당시 중앙정보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의문사진상규명위에 따르면 당시 사건 현장에 처음 출동했던 경찰 이모(56·전남 모 파출소장)씨는 최근 진상규명위 조사에서 ‘당시 변사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파출소로 내려가는 도중 계곡에서 나타난 남자 3명으로부터 ‘본 것 외에는 다른 말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규명위는 사고 현장에서 이씨에게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라’고 총명한 3명의 구체적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들이 중앙정보부 직원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중정의 직·간접적 개입여부를 캐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씨는 또 ‘한달 뒤 사건 현장에서 백기완 씨등 당시 재야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추모회 자리에 중정으로부터 이들의 동향파악을 위해 녹음기를 가져가라는 지시를 받고 지시에 따랐다’고 백씨에게 발견돼 녹음기를 빼앗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south@yna.co.kr (끝)

의문사규명위, 중정 직원 관련여부 조사

현장 첫 출동 경찰 “장씨 의문사 중정 개입 의혹 있다” 증언

송하선 기자 hsahn@naeil.com



1975년 8월 17일 경기도 포천군 약사봉을 등반하다 의문의 사체로 발견된 민주화 운동가 고 장준하 선생(사진)의 죽음에 중앙정보부가 개입했음을 짐작

케하는 유력한 증언이 나왔다. 이에따라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당시 포천지역을 담당하던 중정 직원 명단을 확보하고 조경관 등을 조사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최근 장준하 의문사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했던 경찰 이 모(56·전남 모 파출소 소장)씨로

부터 현장 주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건장한 청년 3명을 만났으며 이들이 ‘본 사실 외에 다른 것은 절대 말하지 말라’고 위협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의문사규명위 조사에서 “현장을 목격하고 바로 파출소로 내려가는 도중 청년들을 만났으며 갑자기 계곡에서 나타난 이들이 중정 직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규명위 관계자는 “사건 직후에 이미 장준하 선생의 사망 소식을 알고 현장 주위에서 관련자를 단속한 신원 불명의 청년들은 중정 직원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이 장준하 선생의 사망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 포천에는 이들로 추정되는 직원

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장준하 사건과 관련, 다른 지역에서 중정 직원이 추가로 파견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문사규명위원회는 당시 당국이 장준하 선생의 사고 현장과 장례식 등에서 참석자들을 도청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 규명위 관계자는 현장을 최초로 목격한 경찰이 씨로부터 “사건 발생후 도청기를 소지하고 당시 장준하 선생의 사고 현장에 출동했다”는 증언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 장준하 선생은 독립운동가 출신으로 75년 의문의 사체로 발견됐다. 당시 당국은 장준하 선생이 등산중 실족, 추락사했다고 발표했으나 사망 원인과 정황 등에 대해 계속 의혹이 제기돼 왔다.

정형근 의원 뗏뗏이 조사받아야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1980년대 초 운동권 학생들을 강제 징집해 특별 정훈교육과 프락치 공작을 벌인 '녹화사업' 조사와 관련해 정형근 의원 등 당시 공안기관에 근무하던 관계자들의 출두를 요구했으나 모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진상규명위가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정형근 의원과 최연희 의원은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였으며, 유홍수 의원은 치안본부장을 지냈다. 진상규명위는 81년 강제 징집돼 철책 근무를 하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정성희씨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였던 정형근·최연희 의원이 시위 참가 학생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를 담당했다"는 담당 경찰관의 진술을 받았으며, 이들에게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들은 의정활동에 바쁘거나 출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의문사특별법에 따른 규명위의 조사활동

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법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다. 과거 군사정권에서 저질러진 갖가지 인권유린, 그 중에서도 의문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어두운 시대를 마감하고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다. 군대에 끌려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온 자식에게 '월북 기도를 하다 발각되자 자살했다'는 등 이중의 울가미를 씌워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은 사건들은 속 시원히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군사독재 시절 직간접적으로 인권 말살에 관여한 인사들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자숙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욱 큰소리치는 거꾸로 된 모습을 우리는 본다.

정 의원 등은 스스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진상규명위의 소환에 뗏뗏이 응해야 한다. '강제 수사권'이 없어 '반쪽 조사' 밖에 할 수 없는 규명위의 한계를 악용해 조사에 불응하는 것은 도덕적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장준하선생 의문사 전날까지 中情서 자택전화 감청

내부 보고서에서 드러나 당일기록은 누락 '의혹'

재야 지도자 장준하(張俊河) 선생이 1975년 경기 포천군 약사봉 등반길에서 의문사하기 전날까지 중앙정보부가 자택의 전화감청까지 한 사실을 보여주는 당시 중정의 내부보고서가 나왔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는 사건 당일의 기록이 고의로 누락된 흔적이 있어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에 대한 중정의 직·간접적인 개입 및 은폐 의혹을 질게 하고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7일 "국정원으로부터 사건 직전 약 1년 여 동안 당시

중정이 작성한 장준하 동향보고서를 입수,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장준하 선생의 행동기록뿐 아니라 전화통화 내용과 시간, 대상이 상세히 기록돼 중정이 상시적인 전화감청을 실시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감청내용중에는 장준하 선생과 함석헌 선생의 통화내용, 장 선생의 부인인 김희숙 여사와 이태영 박사의 통화내용 등이 나와 있어 재야 지도자 등과의 연계·접촉 동향이 하나하나 감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장준하 선생이 사망한 후 가족의 동향과 장례식 동향 등도 기록돼 사건 후에도 감시가 상당기간 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정원이 제공한 이 자료에는 의문사의 실마리를 풀어 줄 사건 당일의 동향보고서는 누락돼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규명위 관계자는 "사건 발생 한 달여 전부터는 하루도 빠짐없이 장준하 선생의 동향이 기록돼 있는데, 유독 당일의 동향만이 빠져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당일에는 동향감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명위는 그러나 사건 당일에만 동향감시가 없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고 국정원으로부터 누락된 기록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진희기자river@hk.co.kr

[930 뉴스]고 장준하 선생 동향보고서 조작 의혹



◎앵커: 그간 확인되지 않았던 고 장준하 선생에 대한 동향보고서 존재가 마침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의 보고서 내용이 조작돼서 이 사건에 중앙정보부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기자: 고 장준하 선생이 의문의 실족사를 하기 1년여 전부터 당시 중앙정보부가 감청을 하는 등 장 선생의 동향을 감시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당시 중정이 작성한 동향보고서를 입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장 선생의 행적뿐만 아니라 전화 통화 시간과 내용, 대상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남관(의문사진상규명위 조사1과장): 몇일, 몇시, 몇분, 몇초 단위로 사망 전후로 해서 동향 부분이 세세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사건 당일 A4지 4장 분량의 보고서에는 대부분 장 선생과 관련 없는 엉뚱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조남관(의문사진상규명위 조사1과장): 고의적으로 조작됐다면 큰 문제이고, 실수나 착오로 났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 이에 따라 진상규명위원회는 사건 당일에는 동향감시를 하지 않았다는 국정원측의 해명이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국정원에 추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고 장준하 선생에 대한 중정의 동향보고서는 그 동안 국정원이 존재 자체를 부인해 온 것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뉴스 박진영입니다.

김준배 사건 관련 보도

**“의문사 김준배씨 검거
경찰에 포섭당해 협조”
대학후배 양심선언**

지난 97년 9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의 검거를 피해 달아나다 추락사한 김준배씨(27·한총련 간부) 사건과 관련, 김씨의 후배 B씨(29)가 자신의 프락치 활동에 대해 6일 양심선언을 했다.

B씨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준배형 그리고 아버님, 무릎꿇고 사죄드립니다’라는 양심선언문을 읽으며, 함께 참석한 김씨의 아버지 현국씨(66)와 김씨의 대학 선배들에게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

김씨의 대학 3년 후배인 B씨는 대학선배로부터 김씨의 은신처를 알려 주면 경찰이 3500만원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6년동안이나 수배생활을 하는 김씨가 새 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경찰에 협조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B씨는 약속했던 돈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범인은 뇌죄로 구속됐다고 덧붙였다.

B씨는 “그날 이후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악몽의 연속이었다”며 “준배형을 기억하는 모든 분들과 국민들에게 사죄드립니다”며 고개를 떨구었다.

강영수기자 nomad@kmib.co.kr

**“97년 추락사 대학생
주요 死因은 구타”**

日법의학자 소견서 보내와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997년 9월 수배 도중 광주 시내 모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것으로 발표된 김준배(당시 26세·한총련 투쟁국장)씨의 주요 사인이 ‘구타’라는 일본 법의학자의 소견서가 나왔다고 7일 밝혔다.

이 법의학자는 위원회가 보낸 시신 사진과 부검 감정서, 국내 법의학자의 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검토한 뒤 최근 ‘金씨의 주요 사인은 추락보다 구타로 보인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그동안 金씨의 사인에 대해 추락 또는 추락과 구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이 나온 적은 있지만, 구타가 주요 사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남궁욱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